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6일(목)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2
 - 종합정책질의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6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6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6
 - 종합정책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728조 원의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민생 부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예산안 등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3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해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지수도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 투자심리도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새 정부가 추진해 온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민간 소비도 반도체 중심의 투자회복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APEC 성공 개최,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하나둘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의 복합 위기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G20와 세계 평균인 3.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하루하루 생업을 지키기조차 벅찬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8.1%인 54조 7000억 원이 증가한 728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재정의 배분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여야는 정쟁이 아닌 국민을 향해 민생의 관점에서 예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원장으로 몇 가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회복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청년, 노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미래 성장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초혁신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 핵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시급합니다.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이 분야의 투자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합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효율적 지출은 조정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의 삶이 팍팍하다고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책임으로 해법을 찾아 갑시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법정 시한 내에 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1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11월 13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당초 간사님들 간 합의된 주질의 시간은 20분이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를 17분간으로 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기간 중 일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결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생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면서 정치·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우리 산업과 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

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 등 내수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고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민생과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 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금융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 증진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 AI 기반 산업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성장동력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최초로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명문화한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활동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다행히도 우리 경제는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 전환의 거센 파고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총 728조 규모입니다. 초혁신 아이템 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되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은 19.3%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력을 제고하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사업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쟁겨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귀중한 의견과 창의적 제안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위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9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6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총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19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님,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특히 금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를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세로 돌아서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금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2%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반등하는 등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구조적 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

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축,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지방 우대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 IMF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재정이 아닌 완화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한 후 저성과·낭비성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을 중심으로 균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사업 역시 10조 6000억 원으로 3배가량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의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입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와 복지, 납세, 신약 심사 등 공공부문에도 AI를 도입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AI 혁신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AI 필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한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인력 3만 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우수 인력 유출 방지의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하여 국가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습니다.

K-컬처와 관광 등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 이용과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 K-관광 패스를 외래 관광객 4만

명에게 발급하고 산재된 해외문화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체계적인 K-컬처 수출 및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향후 2년간 500억 원 지원하고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이 곧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산업·생활 기반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대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육·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9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지방으로 이끌기 위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 23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만 8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000명 이상 확대하여 3만 6000명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개소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특히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월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지하철·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여 서민의 교통·주거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000억 원 확대된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임 경찰 6000명 이상을 충원하고 저위험 권총·조끼를 각각 7000개 이상 확충하여 현장 대응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AI·드론·보라매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이상 늘려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3년간 월 30만 원의 매칭을 지원하고 당직근무비·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확대된 ODA는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실용적 ODA로 재편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지방 활력 회복, 민생 부담 완화 등 이번 예산안의 핵심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안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핵심사업의 결실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11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정책기조 아래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총지출은 총수입보다 2배 이상 높은 8.1%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본예산 대비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전년 본예산보다 141.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경제성장 및 회복의 마중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 및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

서 총지출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여러 핵심사업들이 초혁신경제 및 기술주도 성장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재정총량 검토입니다.

먼저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에 대해 정부는 성장률 회복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증가한 390.2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다만 세수 오차와 관련하여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 본 예산 대비 약 -10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유념하여 향후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예산안보다 5.9조 원 많은 396.1조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함에도 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조세지출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수혜 비중이 높아지는 등 조세지출 정책이 역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세지출 정책의 본래 취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외수입의 경우 올해 매각에 실패한 주식회사 NXC 물납주식 매각대 3.7조 원을 다시 예산안에 계상하고, 최근 통신사·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과징금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중단입니다.

또한 2024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수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개 세입 과목은 수납률이 8.8%에 불과한바 정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미반납금을 조속히 반납받고 개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총지출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27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종료 예정 사업의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성과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지출 구조조정 제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자율계정 이관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는데 일부 이관 사업은 국가 전체

차원의 재원 배부와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이관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단입니다.

향후 중장기 재정지출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재량지출의 비중이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정건전성입니다.

정부는 2026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GDP 대비 -4.0%로 전망하면서 향후 이를 -4%대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확장재정 및 의무지출 확대 등의 여건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세입 기반 확보 및 비효율적 지출 최소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적자성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향후 국가채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50.5%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세입 여건의 악화 및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등 세 가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총 열두 가지의 핵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전환 과제입니다.

정부는 사회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 등의 추진을 위해 총 10.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AX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은 일부 부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요조사와 과제 발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신산업·R&D 혁신 과제입니다.

정부는 R&D 분야의 집중 투자와 국민성장펀드 신설 등을 위해 총 44.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신설에 따라 펀드 간 민간재원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펀드 간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및 요건 등이 면밀히 설계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과제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지원 확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 총 7.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기존 설비 도입단가 변동 추이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지방 성장거점 구축 및 지방 생활환경 개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 구축 및 지역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총 29.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5극3특 전략은 권역별 성장거점 선정이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과제입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주거·교통 지원 등을 위해 총 26.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햇살론과 관련하여 정부재정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시 기존 제도에서 신규 제도로 이동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병복지 및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과제입니다.

정부는 군 장병의 처우개선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총 22.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입니다.

국방부의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신규사업은 관련된 법률 개정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원훈련 사업 등 일부 사업은 편성 기준과 실제 훈련인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에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소통수석님 나와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 분 다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국회에 나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는 과거의 검증이지만 예산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실 예산인 특활비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여당 운영위 간사였을 때인데요.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8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영부인이 관봉권의 현금으로 옷을 여든 벌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특활비가 아니냐는 논란과 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감찰관도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의 검증이 특히 필요합니다.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둘째는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등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 같은 취지로 질문을 했고 총리께서는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반대라고 합니다. 예산심사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다 모였을 때 정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겹치는 일정으로 어렵다면 부별심사 때라도 출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오늘은 경청통합수석, 오후에는 홍보소통수석이 나오기로 합의가 됐고 내일 비서실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무수석 이렇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기합의가 된 사항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 간에 다시 좀 논의를 하도록 제가 말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정책실장……

○**위원장 한병도** 예, 그걸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기재부, 국토부, 행복청, 산업부, 교육부, 해수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과제 제49번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부터 제57번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까지 총 7건의 국정과제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제별로 2025년 추정 및 26년 예산안 연도별 중기재정계획 반영 현황을 정리해서 오후 질문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부처에서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관세협상이, 그 결과가 올해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차 관세협상 타결 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120%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10월,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의견, 대통령실의 12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것, 이에 대해서 지금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에?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정도로 아주 지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10월 협상 그리고 1차·2차 협상 결과 등에서 과채류 부분을 한번 제가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채류에 대해서 8단계의 검역 단계를 거치고 이 중 사과와 감의 경우는 2단계에서 30년째 지금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1차 협상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산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김용범 대통령실장은 ‘US 데스크를 설치해서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정관 산자부장관께서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추가 개방이 돼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사과의 경우 30년 동안 검역 2단계에 머물러서 수입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한 3년 남았다고 할 때 30년의 10분의 1인 3년 동안에 사과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추가 개방입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개선한 정도로 우리는 이번에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지금의 대통령실이든 정부 입장을 계속 옹호하시는 겁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실질적인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명료하게 없었다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사과 개방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US 테스트를 설치하는 것이 수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개선해서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말씀 주신 8단계의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설한다 하는 차원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서 30년 동안 개방되지 않던 사과 또 다른 농축산물이 개방이 된다면 그것은 추가 개방이 아니냐는 거지요. 만약에 3년 안에 농축산물이 1건이라도 더 추가 개방되면 그것 개방 아닙니까? 보호한 거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필요하시면 직접 참여했던 분에게 다시 여쭙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님, 터프한 협상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별명도 얻으셨는데, 그런데 지난 3일에 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의 미국에 투자하는 현금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미국에 가서 우리 기업이 이것을 제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관 장관님,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 제조업 부활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강승규 위원 제조업 부활이지요. 그러면 미국 제조업 부활,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가 투자한 2000억 달러를 가지고 제조업을, 미국에 참여한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관세협상의 그 결과, 제조업의 부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내용이 단순히 미국 제조업의 부활만이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상안에 국내 기업들이 우선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선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자한 대통령인지…… 추켜세우셨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그렇게 인자한지 모르겠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런 표현이 실제 협상 내용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 그냥 사탕발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총리님, 혹시 마키아벨리의 외교 전술 중에 사자의 용맹과 그리고 여우의 교활함 또 지혜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강승규 위원** 그게 국익을 위한 최고의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외교가의 고전적 지침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데에도 사용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종 10월에 타결한 것을 보면 2000억 달러는 현금,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현금과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총리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축구나 야구 등에서 한일전 열렬히 응원한 적 있지요? 그때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한일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관세협상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했다. 그리고 일본의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실제 우리는 연간 200억 달러, 그러니까 투자 상한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일 양해각서를 꼼꼼히 뜯어보니—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넣게 돼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규정 등이 없어서 실제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본 국내법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현금 투자는 1~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대출이나 보증…… 우리 산자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할 때 김정관 장관께서는 ‘우리 3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펀드 등 현금이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2000억 달러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이고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그렇습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석한 것이거든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 일본의 전문가나 언론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협상을 잘한 것 같다는 평가가 상당히 나와 있는 것도 물론 위원님이 보셨을 것 같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강승규 위원** 일이 프로만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것에 동의……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 평가를 할 때, 포괄적으로 일본과 비교할 때 대략 일본과 비슷한 것 플러스알파, 상업적 합리성 확보라든가……

○**강승규 위원** 자,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투자자산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승규 위원** 총리님, 또 하나 일본과 우리 협상을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자금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로 한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이런 협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요? 우리는 10년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트럼프 임기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MOU, 앞으로 MOU 체결 어떻게 발표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10년 동안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기간의 장단만 갖고 그 유불리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기간의 장단이 아니고 200억 달러라고 하면, 1년에 200억 달러씩이라는 것은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우리가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옵니다. 우리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협상의 경과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본하고 굳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가 국가 또는 기업적으로 얻어 낼 이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또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CEO들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점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강승규 위원**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는, 아까도 일본은 국내법상 현금을,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해서—입법사항이 들어갑니다—조약의 체결,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2000억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김용범 대통령 실장이나 비서실장…… 김용범 실장 등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특별법만 하겠다’. 아니, 특별법을 만드는, 그래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현금이, 외화 달러가 매년 3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하겠다, 그냥 특별법을 통해서 무조건 투자하겠다. 이게 과연 지금 그렇게 입법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한 방법입니까? 국회를 그렇게, 선출권력을 중요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강승규 위원 헌법에 조약만이 아니라 입법권이 있잖아요, 입법. 그러니까 국민에……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강승규 위원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한미 양국 간에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아니, 2000억 달러가 재정적 부담이 안 돼요? 1500억 달러, 마스가는 그냥 현금 갖다가 뿌리는, 그냥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이 보장된 겁니까? 3500억 달러예요. 그렇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그 MOU에 의해서 관련 법률의 통과가 실제로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승규 위원 속히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다시 제가 소환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한수원 간에 1.8%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계약이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마키아벨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협상대표단 등에 대해서 지금 당선된 수상이 재협상 등을 선거 과정에서 운운하다가 각료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일본 했네’, ‘일본스럽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기를 세워 주고 트럼프의 기에 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실리를 다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키아벨리를 제가 굳이 다시 소환한 게 여우의 교활함, 여우의 지혜가 일본 협상에서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까 대통령께서는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겁을 잔뜩 쥐 났고 또 그래서 본인이 막아 났다, 협상을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10월 달 가서, 지금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는 훨씬…… 지금 안전장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환율을 딱 두드려 봤더니—한 10분 전 상황이지요—환율이 1445 원이에요. 주가 4000도 무너졌어요,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시장이, 그렇게 지금 주가 양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인기가 치솟는다고 그렇게 자화자찬 하셨는데 주가 4000 무너지고 특히 환율이 1400원대가, 지금 외환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주가 4000 부분은……

○강승규 위원 이런 관세협상 같은 것들이 잘 타결됐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주가 4000 부분은 등락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시점 시간에 있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주가, 환율, 성장 또 소비심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현금 20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 계좌에 계속 입금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아까 1.8%의 기술사용료를 매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매국계약이라고 자평들을 안 하시는지 이런 발언을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스스로 자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 같다, 뭐 매국협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골병들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김성환 장관님, 우리 같은 상임위 했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충남 지역에 수해가 컸지요? 그때 또 그 수해 지역에 우리 장관님 내정자 신분, 그러니까 취임 안 한 상태에서 왔다 가셨지요? 예산 삼교천에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장관 취임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날이 취임한 날이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 취임한 날. 고맙습니다, 다녀가시고.

제가 그래서 전화도 드렸었는데 이 수해에, 이번에 뭐 200년 만의 폭우든 기후변화든 여러 가지 이유 등 해서 하여튼 수해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저지대 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무려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수해 복구비만, 예산군 한 지역만 1400억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홍성군도 거의 1000억대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앞으로 이렇게 복구비 등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복구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국가하천인 삼교천이나 무안천 등을 준설하지 않으면, 이런 하천의 하상이 저지대보다 높기 때문에 수백 억을 들여서 펌프 시설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하천별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 부분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하천의 준설 문제를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아무리 지금 기후에너지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연재앙으로 민초를, 민생을 완전히 아주 갇아먹습니다. 꼭 이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25개 특구 및 클러스터, 산업부의 15개 특구·클러스터, 문체부의 9개 특구·클러스터, 중기부의 8개 특구·클러스터, 농식품부의 7개 특구·클러스터, 해수부 7개 특구·클러스터, 과기부 6개 특구·클러스터, 복지부 2개 특구·클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5개 특구·클러스터, 우주항공청 2개 특구·클러스터. 이 각각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오늘 저녁 정회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민주화의 성지 그리고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 출신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 출범 5개월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경제 성과 그리고 그에 바탕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에서 정상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0.2%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3분기 1.2%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찹니다. 내수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내수가 쾅쾅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수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반가운 겁니다. 성장기여도를 3년 만에 1%p 높여 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판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13분기 동안에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3분기에 드디어 우리 소매판매가 1.5%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10대, 장기 평균은 100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훨씬 상회하는 이러한 경기낙관지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외국인 소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지요. 우리 내수는 지금 인구 감소 등으로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루 오션이 되는 외국인 소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1165만 명, 17.5% 증가했습니다. 여행 지출은 14% 증가했구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만 가면 금년에 관광객 수 2000만 명 그리고 관광 수입 200억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관광 지출이…… 외국인 관광 지출이 국내 소비의 한 2.5%p 정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설비투자 보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게 설비투자입니다. 설비투자가 3개월 동안 있잖아요, 3분기 동안 감소했는데 드디어 5.8% 반등했습니다. 지출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업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 투자가 늘어야지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 일자리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미래의 희망 지표가 되는 거지요.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출은 10월 달, 경상수지 흑자는 9월 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 주력 기업이지요, 삼성전자·하이닉스.

삼성전자 3분기 매출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분기별 영업이익 역대 최고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투자가 우리가 굉장히 부진했지요. 그런데 건설투자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11.4%,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은 분배로 가는 겁니다. 고용과 분배 지표 모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고 한국 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이번에 오셨지요. 그래서 GPU 26만 개 공급 약속했습니다. 13조에 달하고 이것을 공급받는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가 AI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AI, 아마존, 블랙록, 전부 다 한국의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지도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건 뭘까요?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과 신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샘 알트만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AI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젠슨 황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주요 AI 허브국가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지수 보겠습니다.

일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지요,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디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4000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한 나라의 경제 종합성적표가 되겠지요. 우리가 4200을 돌파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증가율 76%, 이재명 정부 들어서 50%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인 겁니다. 영원히 꿈의 영역에서 머물러 보이던 코스피 5000 이제 가시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우리 노후소득을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을 크게 높이고 있지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 8.2% 수익률인데요 이것을 반영해서 장래에 우리가 투자 수익을 전망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물경 33년 늦춰진다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힘만에 의해서는 아니지요.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20.6조 원의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주식시장을 건실히 받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제 지표에서의 청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저력을 끌어낸 게 누구입니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능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성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큰 수치로 보면 종합적으로 현재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비교적 주효했던 것 같고 더 감사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합쳐 주셔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이 합쳐진 것이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부로서는 경제정책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평소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또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올인하는 올바른 국정 비전의 제시, 두 번째 정확한 정책 목표를 타기팅했다, 그리고 과녁을 명중시키는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가지 정책이, 정책 화살이 바로 적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적극 재정입니다. 정부가 술선수범을 했지요. 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0%, 역성장까지도 걱정됐던 금년 경제성장률이 지금 1%, 저는 턱걸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미래산업 육성 정책이 통한 겁니다. 신뢰가 생기고 글로벌 투자가 지금 유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전환 정책이 주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본이득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주주 환원,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구조개혁, 진정성 있는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익을 지켜 낸 통상외교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한 거지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전략적 산업동맹,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 구조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협상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묻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일본의 현금 투자, 정부가 책임져야 될 현금 투자가 지금 5000억 불이지요. 우리나라는 2000억 불입니다. 그리고 납입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29년 1월, 트럼프 마지막 행정부 임기까지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되 연간 상환을 200억 불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장 10년간 그것을 늦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연간 200억 불 우리는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부총리님, 이번 협상을 총괄하셨으니까, 200억 불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들 외환보유고 운용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요.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해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해서 이렇게……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축내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또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없이, 3무의 원칙이라고 저는 그때 주장했었는데요 이것을 견지하면서 이번에 타결을 본 거지요. 그리고 200억 불의 150억 불 정도는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한 분야는 해외 기채를 통해서 한다. 그 정도 기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외환시장의 교란 요인 없이 200억

불 투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내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러한 정부의 성공적인 성과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의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땠습니까?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죽어 버렸지요. 그리고 10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생긴 겁니다. 경제도 죽고 재정도 망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경제·재정정책의 방향을 수립한 거지요. 경기 회복 그리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정부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족쇄가 됐던 재정정책이 이제 성장에 날개를 붙이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러한 평가를 국제사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맞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선도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그래서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어 내는 확대 균형의 선순환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거든요.

부총리님, 지금 내년도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년 추경 대비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 대비로 하면 25조가 늘잖아요. 3.5% 증가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3.5%.

○**안도결 위원** 그러면 경상성장률 4%에는 미달됩니다. 예정처에서 재정충격지수 분석했는데 -0.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경기를 진작하기보다는 경기를 겨우 지탱하는 정도, 시장의 흐름을 지탱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생각건대 경제만 살린다고 한다면 더 많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부채를 걱정을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결 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지출 3.5%에 그쳤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민간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첫째는 재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번에는 기업을 중심에 내세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고 기업의 성과도 같이 난다면 경제 선순환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효과도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마중물 투자를 통해서 여하튼 기업의 투자 그리고 민간소비 그리고 수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4%지요, GDP 대비 -4%.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8%, 그것도 겨우 1.8%입니다. 달성하는 데 우리 내년도 재정이 0.3% 정도밖에 기여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가기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재정수지는 4%를 넘지 않겠다,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지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앞세웠어요. 그렇지만 결국 지난 정부에서 재정수지 비율은 -4.2%였어요. 대부분 -4%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0%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내년에 1.8%, 2% 가까이 달성하면서도 그때 지난 정부의 3년 재정수지 비율보다 낮은 4%,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결국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지요.

27조,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역대 최고치로 보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역대 최고치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9년 말에 국가채무를 55% 정도, 수지 4%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고, 연도별 지출증가율을 보니까 내년에는 8% 높게 가지만 잠재성장률이 달성되면 다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정말 과감한 투자가 경제 회복이라든가 성장 분야에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과감한 투자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에 또 중복 투자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설익은, 준비되지 않은 때 이른 투자들도 편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세제개편안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세제·세정의 정상화라고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되지요. 국가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수입은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가피 증세를 했다고 하는데 증세 규모가 5년 누계치로 35조지요. 이 규모는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감세한 100조에 가까운 것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감세액의 3분의 1 정도를 복원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무너진 과세 기반을 정상화했다. 정상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도 개선이 됐지요. 그래서 법인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상승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도 낮췄어요. 역전되는 현상도 시정을 했고 또 세정준칙도 회복을 했습니다. 법정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지는 겁니다. 이러한 세제·세정 개혁도 지금 착실히 반영한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러한 올바른 정책 기조로 편성한 예산과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기조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방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기웅 위원님, 송기현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의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앞의 두 위원님들께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번에 경주 APEC 행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외교부장관님이나 각료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내용은, 지금 우리 국민 중에 3000만이 매년 해외를 나가지거든요, 국민들도 물론 많으시고. 이 3000만이 매년 해외를 나가는 상황에서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조지아 사태나 캄보디아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외교부하고 해외 공관에서 적은 인력·예산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은 현지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평가를 하지만 이제 3000만이 나가는 시대에서 근본적으로 과연 어떻게 안전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역할과 국민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 오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때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 최근의 국무회의 또 이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나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서 한번 떡워 주십시오. 일지를 한번 떡워 주세요.

9월 4일 날—우리 시간입니다—10시 반에 발생했는데, 먼저 대통령실 홍보수석 계시지요? 홍보수석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오후에 참석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경청수석 계십니까?

아침 회의 가지지요? 대통령실 아침 회의 참석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예.

○**김기웅 위원** 9월 5일 아침 회의 때 조지아 사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않지요? 그날 강유정 대변인이 회의 브리핑을 했는데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9월 5일 날 아침 회의 때 조지아 사태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모르셨다고, 논의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들어 보니까 9시 5일 날 아침 9시 반쯤에 외교부장관님이 보고를 해서 따로 안보실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일이 있고 나서 첫 메시지가 언제 나오냐 하면 9월 9일 날 나옵니다, 9월 9일 날 국무회의 때.

우리 산불이 나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국내에 일이 생기면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든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든가 아니면 대책회의를 주재하신다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 동정 한번 보시지요, 5일 동안. 실제로 리스본 전차 탈선 위로하시고요. 지금 저쪽에 우리 국민들이 317명이 구금되는 사태인데 전통시장 가시고 CGV 가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한 4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에 예정된 일정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당장 무슨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당시에 빨리 총력해서 하라라든가 대책회의를 주재하신다거나 하셔야 되는데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태는 더한데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실제로 11일에 생겼는데 10월 10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지지도 없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한 일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답하실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경청수석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님 메시지 관리나 일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 뭘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바로 다음 날이라도. 왜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지금 기본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서실 쪽에서 안보실과 협업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빨리 일정을 조정하든가 이렇게 하자 협의가 돼야 되는데 비서실 따로 안보실 따로, 안보실은 가서 보고드리고 지시받으니까 나와서 전달하고 비서실은 모르니까 일정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하고 그냥 시장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정해졌던 일정이니까. 캄보디아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부에서 보고체계나 대응체계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한 말씀드리고.

다음은 총리께 드릴 텐데 조지아 사태 발생하고 나서 총리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조지아 사태 발생 사실을?

일정 띄워 보세요, 조지아 사태 일지.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시간은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데요. 저것 나고 몇 시간 후에……

○**김기웅 위원** 바로요?

○**국무총리 김민석** 외교부장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몇 시간 후는 아닌데,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실 보고한 게 9시 반인데 다

음 날.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기웅 위원 다음 날 보고는 받으셨다? 직접 받으셨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메시지는 7일 날 나오셨더라고요. 고위당정협의회 할 때 한마디 짧게 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는……

총리님 일정 한번 보여 주세요.

보니까 5일부터 해서 10일까지 한번 보십시오. 관련된 일정이 없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메시지를 내거나 총리께서도 뭘 하실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신데?

○국무총리 김민석 첫째로는 전체적인…… 아까 비서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대통령과 비서실, 지금 현재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각료들의 소통이, 그 이전이나 과거 어떤 정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소통이 원활합니다, SNS로 바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저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관련자, 책임자들에서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됐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지시……

○국무총리 김민석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김기웅 위원 일정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전략적 판단이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리고 이미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전체 사안은 일종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하게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김기웅 위원 좋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한번 올려 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실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관계자에게 여쭙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사안은 대통령실과 안보실 중심으로 외교부에서 직접 관계자들 중심으로 주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관련한 메시지도……

○김기웅 위원 아니, 외교·안보는 대통령 어젠다니까 거기로 맡기고 경제는 부총리한테 맡기고, 총리는 뭐 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저 두 가지의 사안을 제가 모르지 않았습시다.

○김기웅 위원 아니, 국무를 총괄하시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외교·안보는 대통령 어젠다니까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경제는 부총리가 전문적으로 알아서 하실 거고……

○**국무총리 김민석** 그 각각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일을 합니다. 가령 이번에 APEC을 놓고 보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것, 캄보디아 사태 한번 올려 보세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는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것도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데……

○**김기웅 위원** 아니, 날짜라도.

○**국무총리 김민석** ……

○**김기웅 위원** 전혀?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금 제가……

○**김기웅 위원** 아니,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8월, 9월, 10월 중에. 그 중요한 걸 기억 못 하세요? 정확하게 보고는 8월 11일 날 있었거든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사안은 7월 25일 즈음이 아니라 언론 등에 보도되기 전후한 시기에……

○**김기웅 위원** 9월 25일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즈음으로 기억합니다.

○**김기웅 위원** 9월 25일에 언론을 통해 아신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전입니다. 그즈음에……

○**김기웅 위원** 즈음에, 그러니까 9월 달 언론에 막 나고 할 때 그즈음에.

○**국무총리 김민석** 저 사안이 저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랬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 사안이 저렇게 보고가 와서 보고가 안 된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저도 가 봤지만 지금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재도 그렇고 상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우리 영화라든가 언론에서 그동안 특집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외교부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저 사안도 지금 9월 달, 25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리실에 외교보좌관 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국무조정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차장은 또 실무조정위 위원이고. 또 외교안보심의관실에 외교부에서 국장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네 사람이거나, 말하자면 이 사안을 보고하거나 대책을 건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관련한 것들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김기웅 위원** 다시 총리님 동정을 보니까 저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한 것 좀 띄워 보세요.

적어도 총리께서 캄보디아 총리한테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감인데 좀 진상을 조사해 주고 가족들이 원하니 빨리 시신을 보내 주고, 송환해 주고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달라 전화 한 통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하셔야 되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고……

○김기웅 위원 아니, 글썄, 그것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여쭙보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국무총리 김민석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저때는 저 사안에……

○김기웅 위원 아니, 25일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 김민석 대응체제가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25일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시거나 보고나, 이 사안을 보고받으신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안 하셨잖아요. 지시도 없고 전화 통화도 없고, 현장 가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드리지만.

○국무총리 김민석 이후에도 저런 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제가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셨어야 되지 않냐고 여쭙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사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꼭 관여…… 그러니까 직접 저 사안의 해결에 개입하거나 바로 그때 메시지를 보내고……

○김기웅 위원 누가 건의하지는 않던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또는 캄보디아 측과 논의했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한테 전화 한 통 하라고 건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없었고요. 제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할 일은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기웅 위원 왜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것은 진행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시면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국무총리 김민석 어떻게 조지아 사태나 캄보디아 사태의 저런 상황을 볼 때 공직자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실제 보시면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요.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은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그것은 저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령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끝난 후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아까 대통령님 말씀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 중에 끝난 후에라도 저 관련한 메시지를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9월 25일 아신 이후에도 이 상황은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웅 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할 일은 없다 생각하셨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할 일이 없다는 것과 저 사안을 다른 트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받는다라는 것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총리가 나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사안은 매우 긴밀하고 굉장히 속도를……

○김기웅 위원 긴밀하게?

○국무총리 김민석 속도를 요하는 사안 아닙니까?

○김기웅 위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현장에 가서 움직여야 되고.

○김기웅 위원 아니, 속도를 요하는 것 중에 우선 빨리 협조를 요구하는 게 급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10월 10일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보셨잖아요. 지시 하나가 안 나갔는데 그걸 아시고서도 그냥 가만히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 안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걸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전후의 상황……

○김기웅 위원 25일 날.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그즈음에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기웅 위원 예, 25일부터 10월 10일 보름 동안 총리님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저 상황에 대해서 알았던 시기에는, 그 시기에 정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작동한 건 알겠는데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공판장도 없고. 저것 보십시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걸 아셨다는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국무총리 김민석 공판장 관련해서는 조기에 공판장이 비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낸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보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는 받으셨고.

맞지요? 알고 계셨고,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김기웅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 김민석 저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한 상황 즈음부터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고……

○김기웅 위원 움직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움직인 내용이 뭐냐고, 조치한 게, 보고받으신 게. 보름 동안 정부가 한 조치 내용 보고받으신 것 한 개라도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한 뒤로는 정부가 관련자의 파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것이 캄보디아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김기웅 위원 그런데 아니, 국민들에게 메시지 하나 안 내고 있는 걸 보시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10월 11일이 돼서야 메시지가 나오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메시지 하나가 안 나갔다고 할 때의 메시지 발신 주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것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기웅 위원 아니요, 총리님도 없으셨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그것 왜 안 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저러한 사안이 있을 때 적절하게 관여하고 메시지를 낼 부분이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책 관련한 것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지금 여행금지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앞으로 중요한데 우리 국민이 현지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고를 내고 그들끼리 싸웠는데 우리나라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가고 그 나라를 비난한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계신 우리 교민들도 아주 힘들거든요. 문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일단 첫째고, 나간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송환해서 데리고 오는 게 대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행금지국 가는 사람, 허가받고 가는 사람이 파란색이고 로밍한 사람이 위의 빨간색인데 점점 허가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500명에서 2년 사이에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내 보세요.

제가 지금 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권법·출입국관리법, 법무부도 관련이 됩니다. 과기부도 관련이 되고.

금지 국가 또는 지역을 허가 없이 가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출국 제한하고 여권 발급 제한하고, 불법행위로 되거나 송환되거나 항의 조치 받으면 출국 제한하고 여권 발급…… 이 부분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게 로밍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통화한 것은 우리 통신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통신사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외교부나 법무부에 통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범법자를 발견했으면 신고하는 건 당연한 국민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전부, 출입국관리법 또 법 전체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이는 부분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취지는 다 좋다고 보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태가 난 이후에 실제로 저희 경찰을 포함해서 공항에 실제로 나가서 나가려는 취지 이런 것들을 묻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작동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를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을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총리님, 잠깐 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답답하긴 한데 총리님이 일일이 다 모든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안 했다 그래서 소관하는 부처가 책임 있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리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 얘기를.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통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사안들을 각각 적절한 단위에서 진행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은 통상적으로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책임 있게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도 총리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고 또 총리님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무총리 김민석** 조지아와 캄보디아 2건 다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실 또 저 이렇게 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이에 종합적으로 대응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송기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송기현 위원** 이번에는 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총리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차관님 나오셨는데 두 분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큰 특징 중의 하나로 지역 우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시대

에 관한 청년일자리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이것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 청년의 유출, 거기에 따른 지역 소멸 심화 또 지역 청년 유출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기업은 고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도 발생하는 이런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했었고, 지역에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보조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하는 그런 것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청년을 고용할 뿐 아니라 청년이 장기적으로 실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하면서 또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시작돼 가지고 2021년도까지 1차 사업을 하고 다시 연장이 돼서 24년도까지 지속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 지역청년일자리플러스라는 사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1만 1000명 정도가 시작이 됐다가 21년도 3년 만에 3만 3000명이 넘게 돼서 3배 정도 늘어났고 또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을 보니까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9.9% 정도가 됩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전입해서 정착하는 참여자 비율을 봤더니 이것도 21년도에는 48.3%가 됐다가 24년도에는 64.6%가 돼서 늘어났어요. 참여기업도 물론 굉장히 많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하는 비율도 18년도 처음에 할 때는 85.8%였는데 22년도에는 97.8%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게 되고 지역 정착률도 91% 이렇게 돼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이 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래서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처음에 2021년도에는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그것이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연장이 안 되고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2024년 연장이 안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그 사업 내용을 줄인 원인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예산 대비하면 마지막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줄었어요. 최초 예산은 2396억이었거든요. 그것이 19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 놓고 해당되는 사업도 축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재부 입장이 청년일자리에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플러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달이나 여섯 달 정도의 단기간 동안에 직무교육을 시키고 그동안에 50만 원 정도 교육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6개월이나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50만 원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자리에 취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교육받으시는 참여자들은 결국은 그 교육 기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그 50만 원만 받고 교육만 하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

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서 새로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연계를 직접 하지는 않고 일자리 연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게 돼 있어요. 넘기는데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교육을 받게 하고 무조건 지자체에 넘기는 형태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효과가 있었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없어진 게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 때 이것 대신에 만든 사업이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인데 이것이 그대로 중앙부처에 청년들을 몇 달 동안 인턴을 하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행정 보조사무 정도만 하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취업하고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보조 사무만 하다 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17% 정도가 중도에 그만두고, 국토부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100억 정도 예산이 됐다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642억이 됐고 내년 예산에는 653억 원으로 10억이 늘어나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청년인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청년들께서 중앙부처 사무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정말 효과가 있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취지의 사업이 없어지게 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청년일자리플러스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만 받도록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것 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부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겁니다. 일자리 교육을 체험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교육수당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서의 특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체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좀 굉장히 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중에서 지역 청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고용부 사업이라든지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다 갖다 놓고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한번 봐서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올해 정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형태의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도 앞에 지역주도형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낸 것은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형태로 만들자고 해서 만든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송기현 위원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앞으로의 대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AI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AI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대통령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업 중에서 AI 관련 사업이 대부분 기지정된 선도지구를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광주·전남·전북·대구, 부울경 이런 기지정된 데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이 기지정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예산이 시작되면 그 결과는,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정이 안 된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뒤쳐져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중앙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기부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의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운영기술과 관련된, AI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26년부터 30년까지 약 총 6000억 정도가 지원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편차가 훨씬 많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이나 충청도에 전혀 지원이 없어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30여 개 되는 의료기기 기업이 있고 3개의 대학도 있고 2개의 국책기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수출액이 7억 4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저는 여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도 의료 AX 실증에 관한 최적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강원 지역이나 충청 지역은 인구소멸의 대표적인 지역에다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빠진 것은 이번 예산의 편성 취지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충청과 강원 지역, 제 지역구가 강원도라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역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 특화의 거점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기반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예결위를 안 했지만 예결위 할 때마다 보훈부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예전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거기 계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자녀하고 미망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1차 보훈대상자로 생각하시나요, 아

니면 승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배우자는 1차 보훈대상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송기현 위원 유자녀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유자녀는 배우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한번 보시면 유자녀들이 더 어렵습니다. 유자녀는 돌아가신 분의, 그러니까 전사자의 자녀잖아요. 전사자의 자녀인데 어머니도 없이 성장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런 경우는 지금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승계가 아니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자녀하고, 그러니까 전사를 하신 분들의 자녀, 전사를 하신 분들의 미망인 이런 분들은, 전사하신 분들을 승계해서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송기현 위원 이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계산해 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생각하는 건 안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상이군경분들을 좀 예우해 드리는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전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전사하신 분들을 승계했다고 생각하면 전사하신 분들이 대우받아야 하는 것하고, 적어도 전사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이군경이신 분들보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대우해 드리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결위 할 때마다 보훈부에 유자녀하고…… 유자녀는 후손, 자녀, 유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이군경이 돌아가셔서 가지고 그분의 자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사자나 이런 분들의 자녀, 그런 분들하고 전사하신 분들의 배우자, 미망인들은 똑같이 대접을 해 줘야 된다, 유공자 본인하고 같이 그렇게 해 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문제가 미망인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그게 보훈부에서도 여러 번 검토됐던 사항이고.

○송기현 위원 그런데 왜 안 고쳐지고 자꾸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할 때마다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 지금 당장 한 가지 예만 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60%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면제를. 유공자들 본인들은 90%를 받는데.

부총리님, 실제로 이게 전체 예산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보훈부하고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마침 이 자리에 부총리님도 계시지만 60% 감면율에서 90%로 올리고 연령도 75세 제한에서 65세나 70세로 낮추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예, 동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자녀하고 미망인들은 일차적인 보호대상자다 이런 인식을 가져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강원지역 국민들이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대전환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지역도 응당 함께 참여해서 성장의 과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강원지역은 아무래도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좀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AI 융합 혁신센터 구축 사업을 일단 적지만 예산을 냈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작동하는 것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은 더 많이 간다,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또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강원지역 또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 또 지역사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키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일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데, 버티컬 AI 부분만 하더라도 원주나 강원도 생각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정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또 지금 애초에 올해 25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보다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강원지역이 차별받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고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하여튼 소외된 지역인 만큼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송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저희 지금 관세협상 국회 비준 관련해서,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리고 또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협정 이행을 국내 법제에 연계하기 위한 후속절차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캄보디아대사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 경주 APEC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소속과 활동 그리고 또 국정감사를 한 것에 근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꽃축제처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외교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21개 나라가 회원인 APEC의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자회담을 개최하고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무역전쟁,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이 얼마간은 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일시 중지되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거기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국가…… 글로벌 기업이지요. 국가가 아니지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 간에 미래 성장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젠슨 황 CEO가 이재용 그리고 또 현대차의 총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의장국이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소감이고.

총리님, 그날 마지막에 APEC 경주에서 만찬장에서 만났네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윤후덕 위원 총리님께서서는 APEC에 대해서 소감하고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위원님께서 다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좀 더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김민석 양자·다자 양 측면에서 다 성과가 있었고 양자에는 당연히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다 관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자회의도 다 잘됐고 말씀하신 대로 경주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APEC이 끝난 이후에 거리에서 시민들 또 국민 여러분들을 뵈면서 조금 놀랐는데 의외로 APEC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여러 어려운 시기를 국가적으로 겪었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러 냈다, 국격이 안정되고 한 단계 높아진 것 같다 하는 것이 국민 각자 각자의 격이 높아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행사 자체와 외교 자체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예결위 내용을 하나 하겠습니까.

표를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을 어제, 그제…… 이번 월요일날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총수입과 총지출을, 2026년에 총지출이 금년 25년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총지출이 여기 있듯이 8.1%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어요. 추경 한 것의 예산으로 하면 사실은 3.5% 이 정도만 증가한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그것을 총수입으로 비교하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3.5% 정도의 증가율을 한 건데 추경 대비로 예산을 비교하니까 5.0% 증가를 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본예산 대비로 하면 총지출이 총수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착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으로 대비하면 -10.5%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총지출에서 총수입보다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보는 입장에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확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추경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그전에 기재위 간사 했을 때도 그런 토론을 좀 했어요. 금년에 추경을 한 번, 두 번 한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때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대비로 하면 이게 규모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추경하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2025년 금년 정부 예산은 703조 원이에요, 아니면 670조 원이에요? 본예산이에요, 추경 예산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년으로 전체로 따지면 703조로 봐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 703조지요.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5% 증가하고 저희들이 경상성장률로 따지면 한 4%밖에 안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2026년 예산안은 확장재정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균형예산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년 추경 기준으로 따지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부총리께서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민들은 양면을 다 보시니까, 저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균형보다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니까요.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화면에서도 많이 봤고 또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까지 한미,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성과가 났는데 왜 팩트시트가 안 나와요? 시티가 아니라 시트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워낙 그동안 다뤄 온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 팩트시트가 빨리 나와야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을 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한테 아무것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4일 날 팩트시트를 발표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쪽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안이 다 돼 있는데 미국 쪽에 무슨 부서간의 이견이 있다든지 그쪽에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봐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관계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미국의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그쪽의 국방부, 에너지부 그런 얘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처인지 명시를 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국민이 알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시트는 안 나오니까 거기의 내용 조그마한 거라도 찾아내서 그걸 또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또 표 올려 줘 봐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7월 27일인가 7월 30일 날 워싱턴 가서 경제부총리께서 그쪽 대통령 만나고 면담하면서 1500억 불, 2000억 불 해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1000억 단위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치니까 어디에는 6000억 불이라고, 어디에 가니까 또 9000억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2000억 불은 정부 주도의 것이고 그중에 7월 말에 했던 LNG인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0억 불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 외교부장관님이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협상을 담당했던 산자부……

○윤후덕 위원 산자부장관님, 그때 7월 말에 1000억 불이라는 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오인이 되고 있는데 실체는 에너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산업부장관은 지금 법사위에……

○윤후덕 위원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 당시에는 그 1000억 불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 규모를 저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거의 다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데 미국에서 조금 더 사 올 거다 그런 정도의 얘기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포함해서 1000억 불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 이유가 있는 미국의 연관된 1000억 불이었던 거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간 주도의 것을 가지고 정부 주도의 패키지 금융이라고, 재정이라고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빨리 팩트시트가 나와서 정부에서 빨리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질의하는 데서도 나왔는데 이게 정부 주도하는 걸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규모나 또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조약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부장관님, 우리가 미국하고 논의를 한 게 이게 MOU, 그러니까 조약 그런 정도의 것을 한 것은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조약 기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MOU—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잖아요—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한 거고 그게 타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국내의 재정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작성을 하고 또 준비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외교부장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또 미국은 어떻게 양해를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미국이 제안해 온 것이 MOU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EU와도 MOU 형식으로 맺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점입니다, 조약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것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시트에,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얼추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10년째 돼서 이걸 개정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협력협정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통일부에 여쭙볼 게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새 정부 들어서 저도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접촉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더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더 모색할 수 있는지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일부장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공개된 정보 이외에 특별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 시간 중에, 이 기간이 굉장히 관건적인 시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사이에 한중 관계 또 한미 협의, 한일, 한러, 주변 4대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것이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대북적 성과가 좀 있는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은 일체의 당국 간 접촉을 불허한 상황이 지금 7년 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체육회담 이후에 당국 간 대화는 일체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캄보디아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한 그 보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보충질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상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총리님, 이번에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큰 사고 없이 치르게 된 것에 아주 무척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특히 총리님 몇 번씩이나 가 보시고 또 조현 외교부장관님, 부총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이렇게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서 열린 APEC은 K-컬처 그리고 K-푸드, K-아트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가수 지드래곤이 공연을 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실제 모델인 배우 차은우가 사회를 봤다, 이것은 제가 외신도 보고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봤는데 대한민국 품격과 저력을 세계에 각인시킨 의미 있는 외교무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더 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통상 문제 여러 가지로 아주 고생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하여튼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전부 국민들의 알권리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제가 오늘 질문을 하면 소상하게 좀……

그런데 APEC의 핵심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민이 우려할 만한 지적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질문을 한다, 국민의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회담이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교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성과보다, 대화보다 문서로 남는 합의가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과 AI 반도체 공급 그리고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이 3대 성과가 있었지만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지 않았 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남지 않았다고보다는 마지막 문서화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오찬과 비공개 회담이 이어졌다는 설명만 있고 구체적인 합의 서명도 없고 구두발표로 끝난 이 비문서 협상은 양국 간 해석의 차이로 좀 국익에 손실

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관세협상의 경우는 팩트시트를 최종 작성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양국 간 협상의 경우는 문서로 되는 경우 또 안 되는 경우, 문서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에서 구체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각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정하게 보장하고 또는 보증하고 이후에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확인한 부분이 언제 정도에 우리 국민들이 ‘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참 잘됐구나. 야, 우리 국익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현 장관님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외교부장관 조현** 조만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왜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가 있는지, 통역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끔 적용받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다른데, 이것은 구윤철 부총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협상을 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대만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김대식 위원** 그러면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농산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농산물도 저희들 얘기가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이야기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러트닉……

○**김대식 위원** 미국의 상무장관 이야기보다는, 하기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답답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있다가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신뢰도도 있고 또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러트닉 장관이 얘기한 100% 부분은, 저희들이 99.7%입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한국은 개방됐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로 언급된 엔비디아의 GPU, 이게 공급…… 젠슨 황 회장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26만 장의 그래픽 칩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최신 블랙웰(Blackwell) 칩은 미국 기업에만 제공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

면 블랙웰 칩이 공급되는 겁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까? 총리님,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서로가 말이 다르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GPU 26만 장이 다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 날에도 엔비디아에서 UAE에, 엔비디아의 칩을 아마 선적까지 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려하시는 것은 백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결국은 더구나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제대로 공급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일본에서 어젯밤 11시에 귀국했는데 일본에서 특집으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각 국가의 득과 실을 놓고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좀 유리하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협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협상,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다 각국이 자기 국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저쪽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협상팀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가졌던 안전장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 더해서, 예를 들어 상업적 합리성을 규정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또는 회수의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는다든가 하는 등등 상당히 꼼꼼한 추가적 조치도 집어 넣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의 후속 조치가, 저는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좀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했으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가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MRO라고 있는데, MRO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3단계에 있어요. 이것을 2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2단계에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3단계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게 2단계만 되더라도 굉장히 부가가치 창출도 되고 이익도 내고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런데 우리 한화오션이 지금 거제도에 충분하게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R&D는 부산의 부산대학교에서 한화오션과 협약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을 좀 설득해서…… 건조 이것은 미국의 협조하에 꼭 필요하다면 당신네들이 와서 감시해

라. 그리고 나서 한국의 한화오션에서 충분히 그것 건조하고, R&D 부분도 충분하고 그리고 건조 능력도 충분하고…… 5대양 6대주에 떠 있는 70%, 80%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큰 원칙의 어떤 공감대 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대학과 조선, 한화오션과 부산대학교와…… 이게 국립이고 그리고 MOU도 체결했고 지금 상당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연료 공급의 문제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연료 공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연료 공급에 대한 뭐가 없다고 말씀……

○김대식 위원 코멘트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일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아마 아실 것이고요.

○김대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리 국방장관과의 이야기에서 큰 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한 논의는 이미 긍정적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총리님 말씀대로 승인이라는 용어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는 농축우라늄이 내포돼야 하는데 여전히 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각 부처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선강국이고 조선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양 6대주에 떠 있는 배, 대형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70%, 울산과 거제에서 만든 70%가…… 이렇게 때문에 해운강국으로서, 조선강국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의 조선산업이 한때는 사양산업이었다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인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선 문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2015년인가요, 그때 STX—지금 부도가 났지만, 도산이 났지만—가 중국 다렌 조선산업에 진출해서 굉장히 실패를 보고 결국 STX그룹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부분을 산업정책의 기반에 참고를 하시고 R&D 사업도 이렇게 충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 조선소에 맡기면 저는 우리 기술이 좀 사장될 가능성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KDI라든지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국책기관에서 나온 연구서를 보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PPT 띄워 놔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전체가 가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미국형 위탁 잠수함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이왕에 대통령께서 회담하면서 물꼬를 텃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톱 10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우리도 대외관계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지아주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한민국이 어떤 건데……

이런 부분은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국 투자, 지금 3500억 달러, 한화 506조 3500억 원 투자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설명대로 하면 9500억 달러, 한화 1368조 9500억 원 투자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3500억 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구입하는 1000억 불 그리고 삼성이나 또 민간에서 다른 반도체 하는 그게 1500억 불 해서 6000억 불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20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89조 2400억인데 현금투자 하면 관세 완화를 위한 양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당초에는 미국에서 3500억 불에 대해서 현금을 요청했었는데 2000억 불로 낮추고 나머지 1500억 불은 FDI로 해서 조선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억 불 중에서는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것도 외환시장에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한도를 줄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저는 경제 부분에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4000포인트가 넘어서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현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그러면 달러는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는 계속, 오늘도 아까 보니까 1445원 찍었던데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외환시장은 또 다른 요인까지 겹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MOU나 팩트시트가 빨리 타결이 되면 그것도 외환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개미군단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큰데, 이게 5000까지 갈 것이다 하고 막 차 타 가지고 나중에 이 실망은 결국은 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식시장과 또 외환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그래서 분 단위, 초 단위로 아마 체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최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뭔가 관세협상도 잘 타결이 되고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좋게 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이 한국 경제를 잘 운영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도 너무 싸다 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도 이런 취지에 따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판례를 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배상금 2025년에 1307억 원이 예산 배정되었는데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2026년 국가배상금 예산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액을 기재부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2025년에 지급된 금액에 비추어 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상욱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성된 금액이,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18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1400억 수준인데요. 내년도에 얼마나 배상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상욱 위원** 국가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국민께 불법행위를 해서 배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배상금이 수천억 단위라고 하는 것,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가가 국민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배상금 중에 경우에 따라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로 인한 배상금도 많이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될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당위는 더욱 크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예산 확보와 또 피해 국민들에 대한 위로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또한 수사권·기소권 등이 남용되어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예가 줄어들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특활비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사실 기밀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든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귀한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가 편성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개혁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2025년 검찰 특활비 제대로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금년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수되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검찰 특활비 사용 없이 검찰 조직 운영되고 있고, 기밀 수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사활동경비, 특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2026년도, 내년 회계연도에도 72억 원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2025년도 사용 못 했는데 26년에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코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아직 법무부에서 제대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부처와 달리 법무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과거 검찰의 특활비가 저희가 정당한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오남용, 그러니까 오집행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기존의 기준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또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검찰 권력이 국민에 봉사하는 데 기능하지 않고 정치검찰화 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특정 권력집단에게 충성하는, 그런 국민을 배신하는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활비가 그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 조직 또 법무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감추고 숨기고 넘어간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계신가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과 함께 제조업의 근간이 됩니다. 또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동안 반도체·자동차·철강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큰 부와 이익을 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생산액으로 본다면 자동차 석유 반도체 석유화학 순일 정도로 석유와 석유화학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의 울산 생산 캐퍼를 예로 들어 본다면 울산 내 에틸렌 현재 생산량은 연간 170만t인데 2026년—내년입니다—샤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350만t 이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울산 자체 수요가 200만t인데 이걸 제하더라도 150만t의 추가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요 수출처였던 중국이 최근 5년간 에틸렌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0만t 이상 생산하는 상황이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석유화학산업은 장치산업 특성상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지금 당장 울산만 하더라도 내년이면 가동률 90%는커녕 70% 밑으로 떨어져서 공멸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닙니다. 여수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장관님께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기획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질문하신 바처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날 정부는 석화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석화기업들이 사업 재편 자율협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이런 과잉설비의 감축 노력을 업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화학산업 고부가가치 R&D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선자구·후지원 원칙에 따라서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R&D 수요를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욱 위원 조금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 자구노력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 독과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 간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공정위 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나요? 산업부장관님께서 그 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 협의체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김상욱 위원** 협의체의 주된 논의가 결국에는 생산시설을 축소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생산시설을 축소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에틸렌 산업 특성상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도태되게 되는 시설이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대책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텐데 2026년 회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범정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이면 350만t의 에틸렌이 생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산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200만t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50만t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산업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을 단순히 민간기업만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인허가나 과잉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산업부가 사실은 좀 못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던져 놓기에는 문제의 심각성도 크고요 또 그 여파도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여수와 대산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산업부에서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프로젝트별로 사업재편 추진의향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 간에 사업재편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또 정부는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채권단 금융 실사, 맞춤형 정부 지원안 확정 병행 등 금융위,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금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북한인권센터에 관해서 지금 건립추진단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인권센터 또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보다는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북한인권센터의 취지와 방향성,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과 또 관련된 예산이 2026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외통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정체성 또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약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부지 800평에 건평 700평 정도로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시공 입찰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북한인권센터라고 하지만 인권고발센터 또는 언론에서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해서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이미 기 확보된 부지 800평 위에다가 평화공존센터를 짓고자 내년 예산에 지금 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 불용되는 50억 포함해서 130억을 추가 부지 매입, 450평 인근 부지 매입과 그리고 설계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재부장관님께, 부총리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총리님, 먼저 한 대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합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한 대목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정부는 아름다운 협상이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한 퍼주기 협상이다, 그런 협상 아니냐, 나라 곳간 열쇠를 트럼프에게 맡긴 것 아니냐, 미래의 월급을 차압당한 느낌이다, 이런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국내외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될 국민의 아픔은 누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씩 나눠 내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일시불이나 할부냐의 차이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아 준 협상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약속한 매년 200억 달러는 IMF 때 구제금융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외환 여력일 건데요. 오전에 부총리께서 운용 수익과 기채로 충당해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 결국 부채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52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나누면 52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 중에서 148억 달러는 빚을 내야 합니다. 결국 빚내서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말씀 주신 아름다운 협상이다 또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망했다라는 취지, 아마도 그 양극단의 중간쯤에 현실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고 정부는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협상팀도 그렇고 최선

을 다했지만 만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너무나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우리 국민들이 다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 대한항공 362억 달러 그리고 가스공사 에너지 추가 구매 등을 포함한, LS그룹 30억 달러를 포함해서 한국이 6000억 달러—우리 돈으로 하면 852조 원입니다—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하지만 그 부분 한 번만 더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3500억 달러가 아니라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그에 대한 설명은 이미 부총리께서 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기업의 기투자 등등을 포함한 것을 미국의 일종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합산했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3500억 달러 외에 정부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그 자원이 한 1000억 달러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는 15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종덕 위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미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이제 막 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더 짐채를 가져오고 우리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가 내년부터 두 배가량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제조업이나 지역 경제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벌써 자동차 부품산업에는 줄도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내 산업이나 일자리를 지켜 낸 결과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협상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관세협상의 결과와 내용이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에게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한 저희의 과제라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 총리님, 지난 10월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불리한 내용을 줄여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시간도 민심도 다 우리 편이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리고 타결 직전까지도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타결을 했는지 지금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

을 투자하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의……

○전종덕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대답하십시오.

미국의 딘 베이커 경제학자는 우리 한국 정부가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아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정도만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학자들도 관세 인하로 인해서 기대되는 것은 연간 이익이 한 5조~6조인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 양국이 동등하게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돈은 우리가 투자하고 운용과 관리는 미국이 투자하는 이거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 결과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여론조사를 예로 든다면 이번 협상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 아마 과반 이상이 비교적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전종덕 위원 저는 자세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국민들께서 하는 판단이 현재의 관세협상이 미국과 현재 세계질서라는 현상에 기초해서 우리가 해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협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종덕 위원 총리님, 저는 이 협상 자체가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불평등하고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미국을 위한 협상을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돈을 미국에 투자할 게 아니라 국내 제조업에,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투자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내하겠단, 이렇게 나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협상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을 위한 협상을 했다는 표현은 별로 위원님의 취지를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앞서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믿고 국익을 위해 재협상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국회 비준 관련해서, 총리님은 그동안 계속 국회 동의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 결국은 기업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협상으로 인해서, 줄속 협상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우리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 비준을 생략한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조 5000억 투자를 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법령도 국회 비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은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 비준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번에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약이라면 그것은 비준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조약이 아닌 경우에도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로서의 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비준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을, 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보고 현실로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것을 관세 인하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주권정부답게 정말 투명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풀어 가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내란 청산은 정치적 청산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에서도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우리나라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 국회입법조사처 자산 불평등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봤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불평등의 원인이 자산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에 와서는 자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지고 저출생·고령화·지방 위기·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복지 강화하는 예산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년도 정부 예산을 살펴보니 AI하고 R&D에 소위 물빵을 했어요. 복지 예산은 사실상 정체 수준입니다. 통신 분야는 31%, 과학기술 분야는 19%, 산업 예산은 14.7%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 예산은 8.6%, 보건 예산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AI와 복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기술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출 증가액이 19.7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연상승분, 연금과 같은 자연상승분이 10조입니다. 그래서 정작 정부가 필요한 기초생활이나 노인돌봄, 아동 지원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하고 별반 차

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을 아실 겁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이재명표 복지 예산이 안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도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취약아동 지원이나 한부모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예산의 정체는 초부자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의 방향을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조세 정상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복원하고 조세 정상화를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저희들 금년도 세제개편안에도 과세 형평성 또는 과세 정상화,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인세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습니다. 일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은 짚끔 하셨고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표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초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기업에 자금 공급이 되고 기업에 더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이 돼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부분의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소득의 근원이 노동소득입니다. 부자들의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입니다. 1%의 재벌들, 초부자들은 소득의 근원이 배당소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런 것들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는 소득세보다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불평등은 더 커질 거고 양극화,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 특히나 조세정의 실현을 해야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실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를 멈춰야만 복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자감세 중단 그다음에 조세 정상화 그다음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취지를 저는 공감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기제출했구요. 앞으로도 과도한 자산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시정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될 때, 확장재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민생이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확장재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생이 달라져야 이 불평등도 완화되고 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총지

출의 37%로 금년보다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연증가분이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회복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난번 제가 결산 질의했던 내용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국유재산 매각을 계획보다 두 배 이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헐값에 팔고 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렸고 ‘이런 중요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도 없다. 어디도 검증하는 단위가 없다’라고 제가 제도개선, 보완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혹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또 많이 나타나고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소중한 국가 자산을 적어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총리님, APEC 성공시키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 총리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이 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허성무 위원 IMF 위기 이후에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정말 재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막고 지역의 숨통을 막는 그런 족쇄와 같은 제도이기도 하다는 지적들이 있

습니다.

지금도 예타는 여전히 수요가 있어야 공급한다는 20세기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가 많습니다. 길을 먼저 내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서 지역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예타에서 0.3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와 관계없이 이걸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됐더니 지금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지요.

그리고 강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릉선도 예타 했을 때 0.11밖에 안 나왔습니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이 있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에 500만 명이상이 이용하는 흑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예타 제도가 지역을 옹아매는 족쇄일 뿐이었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요를 보고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고 나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방식의 수요 중심 계산에 얽매여 있는 예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드리면서 이 왜곡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철도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10년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철도망을 계획할 때 망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기재부 예타에서는 개발사업, 사업 단위로 딱 잘라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토부는 멋진 설계도를 그렸는데 기재부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누더기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대표적인 예가 경전선 전철화 구간입니다. 지금 빨갛게 된 데는 전철화가 안 됐습니니다. 파랗게 된 부분은 전철화가 된 곳입니다. 그러면 저기까지는 전철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산에서, 부전역에서 광주나 목포를 가려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길에도 불구하고 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역시 디젤 엔진을 쓰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저런 게 그 구체적인 예지요. KTX가 달리지 못하는 거지요, KTX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도요.

다음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동해안 고속화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입니다. 강릉까지는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삼척 구간 시속 60km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간만 잘라서 예타를 하니까 이 구간만 하면 예타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예타 제도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총리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흔히 서부경남 KTX라고 불리는 남부내륙철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경남 도민의 110년의 갈망, 110년간의 숙원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원래는 저게 김천으로 가자는 주장을 했던 게 아니고 대전으로 바로 가자는 주장을 했던 건데 지리산·덕유산 구간에 워낙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김천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역시 저것도 예타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을 시비 걸면서 예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한 육칠 개월이 흔들려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정식 명칭은 남부내륙철도 추진인데 흔히 저희들이 쓰는 거는 서부경남 KTX입니다. 현재 단계가 저기에 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착공, 착공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총리님, 착공 12월 달 언제 하게 됩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12월에 착공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들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12월 며칠날 착공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직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성무 위원 12월에는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12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허성무 위원 이게 예산이 지난 7월 추경 때 500억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집행이 못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 도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완공하겠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6년 예산에 267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내년엔 그 정도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였고 올해 깎인 500억은 추가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600억에 500억이 더 추가돼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대신 왔는데, 잠시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변동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김천과 거제도까지의 노선인데요. 사실은 김천의 필요에 의해서 이 노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제·고성·통영·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과 북부경남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면 거제에서 착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바람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까지는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30년까지 이거 완공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러면 30년 6월 정도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최소한 29년 연말이나 30년 초에는 완공이 되어야만 공약이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중적인 재정의 투입이 필요할 텐데 총리님이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고 또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여야의 의원님들이 다 고루 관심 가지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연구개발 R&D 부분에서는 예타를 폐지하고 사업추진심사 제도로 바꾸자 해서 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된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25년 지나면서 훌륭한 역할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의 잣대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성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갈망이라든지 미래비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녹여 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철도와 SOC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적극적인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총리님께 드리고, 기재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계신데 기재부장관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더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사실 제가 가칭 범명까지 만들어 놔습니다, 국가투자평가법이라고. 이런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는 KTX 노선도입니다. KTX니까 이게 고속철도다 생각하시는데요 시속 한 80km도 채 달리지 않는 저속철입니다. 전철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꾸불꾸불하고 아주 힘들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지금 1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는 기본 3시간이지요. 이런 데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인구는 김해와 창원을 합치면 160만이고 밀양까지 하면 170만이고 이 노선이 직접적으로 이용객만 해도 170만인데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 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5차 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국토부에 답변을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그 내용을 이후에 계속 챙기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차관님 나와 계신데……

차관님, 그건 따로 답변을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장관님께서서는 하시겠다 그 말씀도, 답변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노선이 가덕도로 가는 노선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가덕도로 갈 때 그 노선에 창원중앙역, 창원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창원시민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뭐…… 이거는 경남도에서 건의한 노선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5차 철도망계획 지금 경제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지금 저희가 10만 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전달을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AI 사업과 관련해서 총리님, AI 내년도 예산에는 10조 10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10조 1000억 들어가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천명하고 계시고 또 41개 부처에서 515개 세부사업입니다. 정말로 각 부처에서 또 각 단위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고 기재부도 그걸 잘 정리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AI 대전환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전략위원회가 있지요? 전 정부에서는 국가AI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9월 26일에 저게 만들어졌고 두 달 후에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저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을 하나 더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훨씬 강화됐습니다.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부처의 차관님들, 지자체의 부지사·부시장까지 들어가서 집행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출범하다 보니 이미 정부 예산은 다 확정돼서 제출이 돼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그 전략들을 집행하기 위한 것은 결국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거의 역할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개정안이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될 텐데 예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략위원회가 정말 앞으로, 내년 1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AI에 관한 예산이 계속 많이 투입이 되고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가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위원장님도 대통령님이시고 부위원장도 3명이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상근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사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고 R&D에 관해서 심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까지 세 번을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 방향을 잡을 때 3월 달에 개입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주요 사업

들 이런 것 할 때도 개입할 수 있고 중기사업계획서 만들 때도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월에 각 부처의 예산안이 나오면 이것을 심사하면서 예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3단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말 컨트롤타워로서 촘촘하게 그렇게 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본법 개정 의향이 좀 있으신지요? 의향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국가AI전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최고의 역량이 모여 있고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거기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 있어서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정부 부처 내 협조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과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지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는 더 잘되었으면 그리고 더 잘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쪽 집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1개 관련 부처 기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515개 단위사업들을 그렇게 집행합니다. 10.1조 원 중에서 GPU 구입 비용도 있고요, R&D 비용도 있고 또 비R&D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R&D 사업은 기존에 집행 과정에서 관리하는 RCM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투명성 확보도 잘될 거고. 그런데 비R&D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할 시스템이 있느냐 그랬을 때 R&D에 비해서는 조금 관리감독 또 성과 분석·평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왜인가 하면 잘해 놓고 극소수 한두 건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 중복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트집을 잡힐 수도 있고 신뢰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중기부의 디지털 전환 사업과 과기부의 AI 전환 사업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 보면 중소·중견기업들하고 지원 대상은 거의 똑같고요. 컨소시엄 구성 형태를 보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 두 사업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공급기업의 수는 과기부 쪽 사업에는 2800개가 넘고요 중기부는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양쪽에 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373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혹시 된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행히도 부처에서 장시간 시간을 갖고 풀어 보니까 유사·중복 사업으로 이중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행될 이 많은 사업들이 범정부적으로 유사·중복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유사·중복된 사업을 가지고 이 부처 저 부처에서 혜택을 보려고 하려는 그런 세력도 있을 수가 있다고 사전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해서 가야 정말 AI와 관련된 국민적 결집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과기부장관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잠깐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올 대비 8.1% 증가한 겁니까, 3.0%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작년 본예산 대비는 8.1%……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님, 국민이 헛갈리게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3.0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윤후덕 위원님 답변에 본예산 하면 8.1%고, 추경 기준으로 하면 3.0% 이렇게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게요 헛갈려요. 부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추경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3.0%라고 말하면 내년에 추경을 못 합니다. 8.1%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총리님은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예가 없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그 보유세 사례로서 들었던……

○조은희 **위원** 제가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세에 대해서 용역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조은희 **위원** 용역은 맡겼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용역이라는 게 꼭 용역 그 무슨……

○조은희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돼서요, 지금 언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은희 위원 중기적으로 보겠냐? 단기적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보유세 인상 안 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내리겠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건.

○조은희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부총리님,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배우자께서 2013년도 경매로 8억 9100만 원에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을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부총리님은 단 하루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단지가 지난해 재건축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올 초에 실거래가가 45억 상당이고요. 현재 동일 면적 호가가 55억입니다.

현재 여기 거주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아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부분이 국민들을 헛갈리게 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이것 부총리님이 하신 말 그대로 제가 워딩을 따왔습니다. ‘재산세 1% 매긴다면 50억인 집은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하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은 집을 내다 팔게 될 것이다’, 언급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 취지를 보셔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예스, 노. 길게 말씀하시면…… 저는 퀴테이션(quotation)을 그냥 따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은희 위원 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55억 주택 가진 사람은 딱 부총리님 본인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부총리님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시면서 계속 부총리 말씀대로 버티실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실 겁니까? 파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실 겁니까? 55억짜리 집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가족들하고도 또 상의도 해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시려면 조금 더 투명해지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마라’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은 뽕뽕한 한 채를 가족과 의논해서 굳건히 지키겠다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사실 부총리님은요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

택 처분 권고가 내려오자 부총리님은 성남의 주상복합은 팔고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언론에서 ‘왜 강남 아파트 안 파냐?’ 그러니까 ‘재건축 중이어서 법으로 못 판다’. 그렇지만 그 법은요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리뭉실.

개포주공 1단지는 도정법에 의하면은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3년 이상 보유자는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푼푼한 한 채를 포기하기 싫어서 ‘재건축 법 때문에 못 판다’ 그러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분당에 있는 집을 벌써 내놨습니다. 판교에 있는 집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놓을 때는 이게……

○**조은희 위원** 불투명합니다. 55억짜리 집을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재건축 집 도정법에 의하면 팔 수 있는데 못 팔겠다고 그리고 안 파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제가 두 집 중에서 내놓을 때는 미등기 전매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나중에 더 따지겠습니다. 지금 변명이 구구절절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민들이 10·15 대책 이후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1년 이내에 주택이 내릴 거다 하시는 분들보다 주택값이 오를 거다 하시는 분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택 공급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집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또 전세 살면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정치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 탓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재개발 인허가권을 다시 중앙으로 뺏어 오겠다. 왜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자치단체가 틀어쥐고 있어서 공급이 안 됐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요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금 지자체가 정착된 건데 이것을 뺏아 오겠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총리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이 막힌 것은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한테도 ‘예스, 노’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까?

○**조은희 위원** 너무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은희 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제 시간을 너무나……

동의 안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책임을 딱 어느 한쪽으로 묻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은희 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다만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심각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것은 관련선거에, 개입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조은희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이따 나올 텐데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착공한 37만 9000호 가운데 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물량은 오세훈 시장 시절 22만 5000호,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3만 9000호입니다. 오세훈 시장 56.7%, 박원순 시장 10.2%, 5배나 차이가 나요.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쪽 여러…… 8개, 9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줄여서 재건축·재개발이 20년 걸리는 것을 5년을 단축을 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이 문제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지 ‘오세훈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화면 좀 다시 보시면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요 정비사업이 839개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43만 1000세대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노도강, 금관구가 서울 중심이 아니고 외곽 지역이에요. 오히려 주택이 떨어지는 지역이 3분의 1 줄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긴 거지요. 그런데 병목을 오세훈 시장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어느 서울시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 PPT 한번 보시면 창신·송인지구, 박원순 시장 도시재생 1호 여기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1호 지역 창신·송인지구 사진인데 당시 서울시는 예산 900억, 국비 100억 해서 1000억 들여서 투입했지만 결과는 벽화 그리기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제사 신통기획안에 넣어 가지고 지금 주택을 6400가구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힘을 보태야지 왜 대통령실장까지 나서서,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오세훈 네 탓이야. 우리 탓 아니야. 박원순 탓 아니고 문제인 정부 탓 아니고 오세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막혔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외면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팩트는 체크를 해야지요, 총리님.

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주택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을 맞춰서 가야 된다,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될 때라고 했는데 총리님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처럼 저는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과제도 깊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논쟁을 하면 사실은 상호 충분한 근거를 대면서 상당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 오 시장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가지려 했던 어떤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통기회를 했는데 실제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데 좀 성과가 딱 잡히는 것이 없더라든가 또는……

○**조은희 위원** 2030년까지 실통기획과 모아주택으로 31만 주택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부도 매년 백삼……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요. 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풀었던 것이 가졌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말씀, 토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조은희 위원** 그래서요 여야가 함께 손을 모아야 된다,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논쟁은, 제가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총리님, 다시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 만드신다고 했지요? 감독원 만드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부동산감독원의 체크, 처벌 대상이 어떤지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가령 김 모 씨가 있어요. 강남권에 20억짜리 아파트 두 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내 주택가의 도로인데 대지로 돼 있는 도로 61평을 구입했어요. 도로 위에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운 좋으면 재개발이 돼서 분양권 많이 갖겠지요. 또 재개발이 무산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이런 도로의 대지 이걸 구입했다 이러면 땅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부총리님 본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로 위 대지인 땅을 20억짜리 두 채 갖고 있으면서 또 구입하는 것은 국민들은 땅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저어하시면 국민이 부동산원에서 뭘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말한 A 씨는 이찬진 금감원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명백한 투기인데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따끔하게 지적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지난 4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는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금융위의 정책 기조가 언제부터 빚내서 투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

○**조은희 위원** 제 시간 다 됐는데 빨리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리스크 관리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일반론적으로 애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부동산 대출은 죄, 주식 빚투는 미덕. 이재명 정부는 집 살 때는 빚내지 말고 주식 살 때는 빚내라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정책의 일관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반론적인 발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시거나 주식 정책을 하시는 분들 좀 투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부총리님부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한테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앞으로 발언을 삼가시라고. 어떻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 그리고 대출은 막아 놓고 부동산은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서는……

주식은 확 내린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정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하고 부동산은 갭투자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부동산원에서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또 부총리님 또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국민들이 동의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하게 투명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민석 총리님, 먼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총리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현장을 직접 열 번도 더 다녀오시고 관내 준비 현황을 챙기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총리님을 매우 칭찬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성과가 결국 이런 디테일이 만들어 낸 성과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어떻게 하면 기념하고 보존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경주 APEC 문화의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국가 문화·외교 거점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약 497억 원, 국비 348억 원 규모, 경주 엑스포공원 내 9500㎡ 부지에 전시·공연·국제회의 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APEC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세계 21개국과의 문화 교류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2026년 예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 14억 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APEC이 남긴 외교적 성과를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산업 성과로 연결하려면 또 이런 것들이 민관정을 망라하고 전부 문화외교로 연결이 돼서 어느 차원에서나 성과를 이루게 하려면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국회 APEC특위 위원들도 끝까지 경주 APEC의 성과가 유지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표본으로 남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주 APEC 성공을 이끌어 내신 그 의지로 이번 사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외교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재원 위원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졸속 추진 사업이자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개입한 특혜 사업의 전형인데요. 이 사업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이영희 명인이 2020년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교계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다, 오랫동안 건의해 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종교계를 비롯해서 무형유산 전승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단기간에 개정되고 첫 적용 대상이 이영희 명인이다,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가 참 어렵지요.

심지어 과거 2009년 전반기까지도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 관련 건축물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도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그런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3년에 졸속으로 진행된 시행령 개정이 이런 취지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시대를 역행한 그런 행위입니다. 국립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목적 또한 모순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건립부지의 입지 타당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이미 국가무형유산 전수

교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국가유산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된 전승자들에게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또 접근성 개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1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량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에요. 문화 전승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명분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중복사업의 성격이 오히려 강하고요. 결국 기부채납받은 땅을 소비하기 위한 허울뿐인 그런 목적사업이다, 그런 사유에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은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PT 보시면 해당 사업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총사업비 400억 규모, 2024년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실시설계, 2029년 개관 목표로 제시가 됐는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4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나 연장돼서 올해 9월 말이 돼서나 완료됐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협의 대상기관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하지만 무작정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유산청은 용역 완료가 연기된 사유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장 일정 변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건립부지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 없어서 길 내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 회사 등등 너무 많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치면서 이 진입로 문제 해결하는 데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도 9개월씩 연기되는 마당에 어떻게 사업을 잘 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PPT 보시면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 용역 결과보고서에 동 사업이 국정과제 세부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 허위예요. 이 사업은 어느 국정과제 세부사업에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는 세부사업은 선정하지도 않습니다. 국정과제 세부사업 선정이 아니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각 부처 실무 단위의 계획안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무조정실은 당연히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2주간 담당 부서 확인과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가유산청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국정과제로 혼동시키는 그런 행위이고 예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 명분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무형유산 계승과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공공기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업은 우리 국가유산 보호가 아니라 권력과 사적 관계를 위한 문화행정의 사유화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이 연기돼서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재부 타당성 심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전수교육관 사업은 재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심사를 논의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이 사업 백지화하셔야겠지요? 추진 배경부터 절차까지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각 중단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이전 시행령 개정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취지를 지나치게 역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미 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말씀은 동의가 불가능한데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이렇게 여러 기관의 문제가 엮인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 저희들한테 타당성 심사 요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관계 기관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최휘영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지요. 그런데 청와대 관람 운영을 맡고 있는 청와대재단은 설립 이전부터 필요성과 효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청와대 관람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는 일인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이후에 별도의 재단이나 기관 없이 비서실이 직접 관람 운영을 담당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이 관람 업무를 맡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람해설사 5명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경찰 인력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질서유지, 안내, 해설까지 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면 개방 이후에 관람객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와대재단은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이 수행해 오던 관람 업무를 간판만 바꿔서 옮겨 놓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기존 조직이 하던 일을 재단 명칭으로 이거한 것에 불과하고 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이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8월 1일부로 청와대 전면 개방이 종료가 됐습니다.

PPT 보시면 청와대재단의 정관 제1조(목적)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어울리는 활용을 통해 청와대를 역사문화자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즉 청와대재단은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전제로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확정되고 청와대가 다시 부분 개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재단 설립 목적은 이미 소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청와대재단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재단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청와대재단은 행정적인 필요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의중에 따라서 상

징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기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오히려 먼저 그 한계를 검토하고 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처의 장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해산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의원실이 문체부 담당 부서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자료제출도 미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이런 태도 보여서 되겠습니까? 투명한 행정입니까, 이게?

장관님, 문체부가 제출한 청와대재단 관련 세부사업 예산안을 보시면, PPT 보시지요.

2025년에 존재하지 않던 행사 사업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소통, 문화 행사 활성화 이런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 명칭이 중복되고 구분도 불분명합니다. 마치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예산을 쪼개서 그냥 퍼뜨려 놔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게다가 K-민주주의 시민학교 같은 사업은 처음 보는데요. 민주주의를 지켜 온 공간은 그동안 국민이 싸우고 목소리를 낸 광장과 국회였지 과거에 대통령이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청와대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청와대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사랑채 관리는 청와대재단 아니고요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역시 대통령비서실하고 한국문화재단—현재는 국가유산진흥원이지요—여기서 충분히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중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립 목적이 사라진 기관 계속 유지하는 것 행정 효율성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단 존치 여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합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재단 계속 둘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청와대재단의 단계적 폐지와 기능 이관을 공식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과 협의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 결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관람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위원님 지적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통령실과 협의 조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다시 질의드립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자로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건축물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한 145m로 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종묘는 단순히 국내 사적이 아니지요. 이제 세계유산입니다. 1995년에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최초로 등재가 된 유산입니다. 상징

적 의미와 관리 의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운4구역 145m 고층 건축물이 종묘 세계유산적 가치라든가 나아가 등재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실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서울시에 15회의 공문과 그리고 회의를 거치면서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말씀드렸으나 아쉽게도 지난, 특히 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39층, 40층을 올린다고 변경 고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묘는 뛰어난 건축 유형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탁월한 경관으로 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입니다. 과거의 조선 신하들조차도 왕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는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김재원 위원 조금 줄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종묘 등재 당시에 PPT 보시는 것같이 경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등재 후에도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훼손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의 신축이 허가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이미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었지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이번 고시가 이런 국제적 약속을 위배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이번 변경 고시로 종묘가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취소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유산청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 가지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유네스코 등 관계기관과 그리고 국내에서 긴밀히 소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만약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하고 유네스코 권고를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한다 이랬을 때의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은 위험에 처해서 세계유산이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크게 보면 100m, 180m나 그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국민과 함께 전 세계에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한다면……

○김재원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미래세대에게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실제로 개발행위나 고층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등재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즉시 시행하시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보고하시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존대책 병행하십시오.

단순히 도시계획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세계유산 보호의무의 이행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부산에서 세계유산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개최국이 됐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십시오.

오. 문화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어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님, 최근 확인해 보니까 정부 부처 국회 보고체계가 국가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법률상 제출의무 있는 연차보고서 5년 내에 163건 중에 단 36건, 22% 이렇게밖에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국회가 정말 기본 정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순 형식 논쟁이 아니라 국가 책임과 행정 기본을 지키지 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연차보고서의 통합관리체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 누락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또 법은 명확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행되지도 않고 관리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한다고 여기실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연차보고서에 대해서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썩어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 해서 주식 사라고 그러지 않나.

정부는 사실 이번에 적자 부채 규모가 110조 원 되는데, 정부가 빚내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110조나 부채 규모 쌓아 가면서 국민들한테,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면서 하는데 정작 필요한 주거사다리, 그런 빚은 내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5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대입니다. 작년 대비 2.4%가 올랐는데 부총리님, 물가대책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게 언제입니까?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물가대책은 추석 물가대책도 발표하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점점을 하고요 그저께도 점점을 좀 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점검만 하시지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신 적은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설 때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15개월 만에 사팻값이 20%가 오르고 쌀값이 20% 올랐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대책만 벌써 세 번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 쪼개 갖고 물가대책 발표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MOU라든지 조인트 팩트시트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예전에는 합의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우리 장관님들이 가서서 오벌 오피스에서 한 게 엇그제 같은데, 10월 30일 날 이번에 마무리 지었는데 7월 31일 날 한 거는 타결이고 이번에 한 거는 타타결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느낌이 난단 말입니다. 미국의 야구선수가 그랬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MOU 상태로 있는데, MOU 상태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못 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끝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마지막 타결은 아직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MOU를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이번에 사실 통화스와프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비자 문제도 일본은 상무부에서 발급해 준다고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비자 문제는 이미 지난번 조지아 사태로 한미 간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바로 어제 비자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이 다시 한번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통화스와프가 진행 안 된 이유는 답변해 주실 수 없다는 얘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통화스와프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준영 위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부총리님,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받으셨지요, 예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국회 비준동의 왜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때는 전반적으로 법 형식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가능하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더하기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배준영 위원 다양한……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같이 느껴지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한미 FTA 개정 때도 국회 비준동의안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그때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요한 부분은 국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또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이번에 한미 간 타결된 협상이 한미 FTA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것 아시지요? 0%가 15%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은 한미 FTA 자체의 변경보다는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기존 한미 FTA를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수를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전히 MOU 상황이고 여전히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인트 팩트시트나 그다음에 MOU……

○배준영 위원 그러면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실 겁니까, 결정이 됐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은 양국 간 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지금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3500억 불이라는 건 말이지요 제가 한국은행에 물어보니까 192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292조 원의 경제적인 부가 창출 효과가 있는데 그냥 국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비준도 받지 않고 이렇게 큰, 법이라는 큰 파이프를 만들어서 매년 30조 원씩 그냥 미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우리 추경 할 때 처음에 이런 똑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예결위 해 가지고 지고지난한 시간을 거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지금 미국하고 하는 이 MOU 방식은 조약의 형식이 아니고요. 양국 간 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지 않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책임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3500억 불, 아니지요, 이제 2000억 불이 됩니까? 이게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외환 관련해서는 외평기금 같은 경우도 통합재

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편입……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억 불이 이런 돈 파이프를 법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데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안 되고 국가부채에도 잡히지 않고 그러면 그냥 현금을 그렇게 투자에 관련된 통제나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MOU나……

○배준영 위원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아직은.

○배준영 위원 답답합니다.

김정관 장관님, 이번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그랬는데 저는 좀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거래의 기술’ 보면 ‘아이 에임 베리 하이(I aim very high)’ 그래 가지고 끝까지 푸시 푸시 푸시 해서 목표를 얻어 내는데 굉장히 목표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좀 아쉬운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국무부에서 비자를 내지만 일본 같은 데는 상무부에서 비자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협상을 타결시켰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300명이 그렇게 쇠사슬에 끌려가고 사실상 강제 출국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미 상무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적 합리성에 의거해서 루트닉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투자위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루트닉 장관이고요. 또 협의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군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두 위원회가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서, 우리 2000억 불이 가는 게 국민들의 혈세 맞는 것이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민들의 혈세가 2000억 불이 가는데 그게 정말 소중하게 잘 쓰여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저희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당연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에 가서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알래스카의 가스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말하자면 서제스트(suggest) 하면서 좀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스관 사업이 하이리스크 산업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익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하이리스크 사업이고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는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벗어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알래스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가스 안보의 다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구매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나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미국에서 하도 확정적으로 그것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료가 안 되는 이유가 국방 안보 분야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내용은 아니고요.

○배준영 위원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안보 문제는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 때문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작권 전환에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3단계를 논의하고 계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는 그런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 국방비의 한 1.4배고 세계 5위의 강국이고 그래서 저는 전작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미국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국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번 여쭙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국방비를 2035년까지 3.5%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OTP, 조건에 의한 충족에 의해서 전작권이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단계, IOC·FOC·FMC인데 22년도에 2단계에서 평가를 마쳤고 내년에 가급적 이것을 검증을 끝낼 생각입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를 마쳐야 3단계 액션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구성군사령부가, 6개 구성군사령부가 설립이 됩니다. 이미 금년 말까지 4개가 설립이 되고 나머지 2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작권은 되더라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더 촘촘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이 역시 한미방위상호조약에 의해서 양측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는 어느 일방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장관님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배준영 위원 주한미군 철수는 추가 감축은 없어야 된다는 게 장관님의 의지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대신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면서 이번에 약 6조 원 이상이 7년 만에 국방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3축 체계에 대한 더 강화, Kill chain·KAMD·KMPCR 3축 체계에 대한 강화 예산이 이번에 22.3%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장관님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번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핵연료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관련된 이런 거를 매개로 해서 협상을 미국과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핵 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이런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과 회담을 할 때 중국 쪽을 막기 위한 잠수함이 필요했다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걸 꼭 중국을 겨냥해서 한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게 민수용이 아니고 군수용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료입니다. 이 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창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전략자산 무기인데……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대통령 참모분들도 계시고 내각의 여러 분들 계신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드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협상하는 데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보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국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하나 여쭙보겠는데, 제가 소추라는 말에 대해서 법률상의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소추, 기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으로 법제처가 직접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소추가 뭐냐 그러니까 ‘헌법 및 법률상 소추의 정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강학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 소추는 검찰 등 공소권을 가진 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즉 기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추한다는 것은 곧 공소를 제기한다, 즉 재판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챗GPT 말이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거는 챗GPT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인이 차관까지 올라오시려면 그런 법률적인 상식

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서면으로 답변드린 내용……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대법원에서 나오셨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출석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소추한다는 것은 공소를 제기한다, 즉 재판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라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의견이 다르십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학상 이론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재판부에서 적정한 판단,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는 건 저녁도 안 먹고 한다는 얘기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갑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우선 이재명 국민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대통령님과 그리고 총리님, 국무위원님 등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경제가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또 APEC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으며 미중일 등 외교관계가 복원되거나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도 높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또 요새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의 시초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25년 7월 국무회의 및 8월 달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방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다음에 공공재산에 대해서도 2022년 12월에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라고 해서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산들도 매각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헐값 매각 사례도 지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도 살펴보실 예정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 정부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이 가급적 작은 정부로 가자라는 그런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취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취지로 실제로 부정적 측면으로의 해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바 부정적 측면에 있는 부분들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승원 위원**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 임의조사만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의문 나는 점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구잡이로 국유 부동산을 매각한 윤석열 정부, 이게 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건데

2022년에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 미만인 건이 5건, 4.4%밖에 안 되는데 2023년도에는 42.4%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8.7%, 2025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64.8%로 더 증가되었다가 이재명 정부로 바뀐 후에 그나마 급격하게 낮아져서 이게 지금 51%로 통계가 잡힌 겁니다. 60%가 넘는 금액이 감정가보다 더 헐값에 매각됐다는 점이 통계로써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유재산에는 유가증권도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최고조로 헐값 매각을 하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34조 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46조 원을 매각을 해 버리고 2024년도에는 33조를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78조를 매각해 버립니다. 즉 45조를 더 초과해서 매각해 버리는데 이것이 어딘가 하고 살펴봤더니 유가증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음 자료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 316조 되는 유가증권이 289조로 27조를 갖다가 팔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핵심은, 외환평형기금에서 증권 그리고 주식 그리고 채권이 있는데 아마 증권 분야에 많이 팔아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혹시 지금 파악이 되신 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종합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일단 막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사의 범주 그다음에 문제의 건으로 파악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 점도 살펴 주시고, 지금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팔았다고 하는 건데 외평기금의 32조를 팔았는데 그게 2024년도 10월·11월에 집중이 됩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가 의혹이 많으니까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10월 달과 11월 달에 현금성에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니까 이 점도 깊이 살펴 주셔야 되고.

이 대부분의 자산이 정부 관계부처 중 어디에 혹시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기재부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조사를 하겠지만 총리실에서도 중심이 돼 주셔서 왜 이렇게 팔게 되었는지, 그중에 또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는지까지 조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기재부에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종합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유재산 중에 국민들에 쉽게 와닿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좀 보여 드리면, 이게 지금 구로구 오류동 건인데요 보시면 이게 대로변에 네모난 아주 번듯한 땅입니다.

자료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대로변에 있는 네모난 번듯한 땅인데 감정평가액 자체도 시가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평가액의 50%입니다. 이것 누가 특혜를 받았겠습니까? 저희가 등기부등본 때 보면 이 등기를 취득한 데는 대개 시행사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주택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기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또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헐값에 매각해서 시행사만,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땅도 보시면 논현동 72-10 땅인데요. 학동역에서 5분 거리입니다. 이것도 감정가의 65%에 낙찰이 됐고요. 다음 자료화면도 반포동, 신논현역에서 3분 거리인데 네모나고 번듯한 땅이고 빌라촌이라서 누구나 탐낼 땅인데 감정평가액의 64%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수인이 사실은 회사인데 그 이사들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게 마사회 땅인데요.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교대역 사거리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땅도 감정가의 80%, 79%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꼭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제시드릴 것은,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실은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팔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을 통해서, 대개 등가교환이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 서로 현금을 보완·보충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국유재산을 국민을 위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매각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제도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이 전수조사 결과가 혹시 언제쯤 나올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딱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막 시작 들어갑니다.

○김승원 위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계속 저희도 조사를 할 텐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대안과 그런 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 홈플러스·MBK 사태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종사자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또 전단체 발행과 관련된 피해자들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들 합치면 한 30만여 명의 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상 그리고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정관이라든가 설립신고서를 보면 홈플러스를 10년 동안 경영했던 김광일 부회장과 그 뒤에 있는 김병주 씨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MBK가 수취한 수익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출자전환이라든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370억인데요. MBK가 10년 동안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로 해서 가져간 보수가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관리보수로 해서 5000억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성과보수로 해서 7000억을 가져갔습니다. 370억씩 물어 놓고 1조 2000억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 블라인드펀드 3호는 MBK 김병주 회장이 미국계 시민 아닙니까, 외국에서? 그래서 해외에 투자자들이 많고 사실은 이 금액이 해외로 흘러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점 점주들 그다음에 중소형 납품업체들, 전단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광일 부회장과 김병주 회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 자료화면 보실까요. 정관을 보시면 맨 하단에 주요 인력은 김병주, 김광일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주요 인력은 회사 관련법인이나 중대한 법령위반과 관련하여 확정판결, 사기, 중과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인정받는 그런 사법 판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주요 인력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업무집행사원이 그와 같은 위반을 인정한 후 지체 없이 그 주요 인력을 해고하고 해당 주요 인력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당시까지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홈플러스 정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병주 씨와 김광일 씨가……

그 전 자료 화면, 맨 처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2015년 9월 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투자제안서를 보면 우리는 홈플러스 중요한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투자받은 돈을 홈플러스의 정상화라든가 미래를 위한 경영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의 주요 골목골목에 있는 지점들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킨 다음에 투자자한테 돌려주겠다고 투자자한테 그렇게 제안해서 투자를 받고 그대로 10년 동안 실행을 합니다. 폐점된 점포, 팔려 나간 점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고통을 10년 동안 점주들이라든가 종업원, 종사자들이 계속 그것을 봐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는 사기성이 있는 또 중대한 과실 행위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정관에 있는 주요 인력, 김병주 씨와 김광일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법무부에서, 차관님 나오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김승원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 반부패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를 시작한 지는 상당한 개월이 도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원 위원 꽤 됐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아마 두 가지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선 전단계, 희생 신청을 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발행된 전단계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전체가 4000억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승원 위원 전담채는 판사 출신인 제가 봐도 구조가 거의 사기 범행에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양증권이라든가 LIG 쪽에서 그런 비슷한 짓을 했다가 징역 4년, 아마 1심에서 징역 7년인가요,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례가 떠오르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께서 이것 챙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마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 아까 말한 정관상의 주요 인력,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임시킬 수 있고 김광일 씨, 김병주 씨가 MBK를 통해서 수취한 1조 2000억 원을 다시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에 토해 낼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됩니다.

검찰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요. ‘민생, 민생’, ‘수사권, 기소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만든, 배포한 자료인데요. 지금 회생 신청하고 나서 이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일 씨는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관리인이 됐습니다. 관리인은 회생 신청을 하면 사실은 법원 판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회사가 어떻게 회생 계획이 어떻게 또 M&A를 주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책임 있는 사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관리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M&A가 지금 안 되고 있고 M&A 하겠다고 한 업체가 두 군데인데 매출이 3억, 5억밖에 안 되고 해외에서 1조 8000억을 들여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 있는 회사겠습니까? 그리고 유통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또 MBK를 팔아 버리려고 합니다.

관리인을 저는 개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앞에는 안 게시지만 아마 법원에서, 행정처장님이나 차장님 계실 텐데 관리인 개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회생 그대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실까요.

대안입니다.

지금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곳곳으로 오면서 물론 투자 활성화라든가 경제에 굉장히 좋은 역할도 미치지만 사실은 이게 이득을 목표로 하는 그다음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수익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

고 있고 홈플러스가 그 예인데요.

그래서 개별법상 사모펀드 인수를 규제하는…… 여기 보시면 기술, 산업부는 국가핵심 기술 보유기관·전략기술 보유기업에 있어서 해외 인수라든가 합병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국토부는 항공사업 면허 시 외국자본 2분의 1 투자 금지하는 그런 제한 조항이 있고 국토부에 있어서도 운용사의 진입규제라든가 자산 매각 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조항들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이런 국가의 핵심기술 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회사를 인수할 때에는 정부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로 되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니까 사모펀드가 경기도 남부권 버스회사 거의 열몇 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난다고 그 차고지를 팝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차고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구도심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파트 부지로 팔아 버리면 거기서 또 수백억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축소로 인한 불편은 국민들이 다 짚어지고 있고 준공영제를 하니까 나라 세금이 거기 또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차고지를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거기서 수백억 이득을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이번에 총리님께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의 진입규제 또 엄격한 심사에 대해서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꼭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언제 또 한번 위원님 모시고 말씀 들을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총리님 또 국무위원님들, 내각 전체에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더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총리님께 헐값 매각 정부 자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자산이라는 개념에는 공공기관 자산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공공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시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언론에 줄여서 ‘헐값 매각’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에 좀 혼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압니다만 이게 헐값 매각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정당한가의 측면도 있고 의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예를 들면 절차, 강압 여부, 특혜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가격 측면, 의도 측면, 절차 측면이 다 포함되겠지요.

○**노종면 위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유재산법 제3조에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원칙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하면 좀 좁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공공 자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저 원칙이 적용된다고 제가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매각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의 원칙은 준용된다고 그렇게 해석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가격 측면, 의도 측면, 절차 측면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차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가격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보고 계신 저 국유재산법은 법 이전에 상식의 차원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총리께서 YTN 지분 매각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일부 야당에서도 그렇고 유진 측에서도 제값을 줬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헐값 여부만이 문제는 아니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노종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YTN을 제가 적시해서 ‘등을 포함한’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예단이나 개인적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부총리님, 조금 전에 총리께서 신속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이라서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기재부에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벌이잖아요. 목표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게 저희 기재부하고 관계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다 협업을 해야 돼 가지고 전수를 하려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종면 위원** 올해는 넘기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연내에도 할 수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노종면 위원** 조금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타워, 공식 명칭은 N서울타워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케데헌 성지로 각광받기도 하던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징이 될 만한 자산들 금액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기 쉽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편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상징성이 갖는 이른바 브랜드가치 이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종면 위원** N서울타워가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YTN……

○**노종면 위원** YTN은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노종면 위원** YTN 그러면 그래도 신뢰받는 언론사일 수 있고 또 30년 동안 보도를 해 왔고 공적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YTN이 소유하고 있으면 서울타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상식인이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YTN은 이미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넘어갔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되는 서울의 상징, 한국의 상징 서울타워는 유진이라는 그룹 소유예요. 만약에 유진그룹이 자기네 자산 매각하겠다고 서울타워 내다 판다고 하면 그 대상이 외국 자본이라도 우리 정부가 막을 길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종면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막지요. 어떻게 막아요? 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겠다는데. 그렇지요?

저 서울타워를 비롯해서 상암동에 있는 스마트빌딩 YTN 사옥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을 가지고 있는 YTN의 기업가치는 얼마일까, 그것을 산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2023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공기업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넘겼지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PPT 보겠습니다.

그때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가 돼서 YTN의 기업가치를 최대 약 1조 800억 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그때 삼일은 1대 주주 한전KDN 21%만 파는 것으로 매각주관사 계약을 하고 파는 대상인 21.4%의 매각 가치는 2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YTN 지분을 21%만 판 것이 아니라 3대 주주인 마사회까지 합쳐서 31%가량을 팔았어요. 삼일의 기업가치 환산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3350억 원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유진ENT, 유진그룹이 만든 YTN 인수 회사 실제 인수가는 320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다음 PPT 보시면 인수 지분이 20%대에서 30%대로 확장이 됐잖아요.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울타워와 30년 보도 채널을 운영해 온 한

국의 CNN으로 불리는 YTN의 브랜드가치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저 3000억 원대의 인수가 적정하다거나 심지어는 비싸다거나 이런 돈의 논리를 앞세워서 유진에 의한 YTN 지분 매각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절차는 더 문제입니다.

다음은 PPT 보면서 말씀드리지요.

이 YTN 매각 작업의 출발이 저는 저기에 있다고 봅니다. 2021년 대선전이 한창 달아 오를 때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YTN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허위 경력이 문제야? 나도 한번 파 볼까? 이거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육성으로 이번 국감에서 온 국민께 들려 드렸습니다. 저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하단에 있습니다. 통일교의 넘버 3로 불리는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라는 권력을 농단한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는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사실상의 제안이지요—거기에 건진이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한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는 YTN 인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백,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윤영호라는 통일교 인사를 통해서 건진법사 거쳐서 김건희에게로 전달됩니다. 이게 YTN 인수 과정 시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YTN 공기업 지분을 내다 팔라고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놓고 압박합니다. 2022년 11월 건진법사가 통일교 윤영호에게 보낸 문자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결국 저런 절차를 거쳐서 YTN 매각 절차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재부는 추경호 장관 시절에 출자지분 정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이제 공식화를 한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전KDN에 YTN 지분매각 의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한전KDN은 보유 의사를 밝히요, 매각하지 않겠다. 이것은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바로 매각하라고, 권고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사실상 압박을 가합니다. 이창양 장관 시절이에요. 그리고 마사회도 지분매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문건으로 농림부에 밝힙니다.

그런데 정황근 장관 시절에 농림부의 압박 때문에 마사회도 입장을 바꿔요. 2022년 11월 기재부는 YTN 매각 방침을 그 두 공기업을 꼭 집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자 한전KDN 이사회, 마사회 이사회가 잇따라서 지분매각을 의결합니다. 이것은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어서 공기업 지분, 공적 자산을 매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전 단계에서 건진법사와 통일교 인사가 이철규 의원 등등이 동원돼서 이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입찰 과정, 이제 매각주관사가 선정돼서 지분이 시장에서 내다 팔리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전KDN이라는 1대 주주의 매각주관사는 원래 삼성증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삼성증권이 돌연 포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삼일회계법인이 차고 들어갑니다.

마사회 지분 매각주관사도 원래 따로 선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농림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 농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이 단독 입찰이었는데 포기하고 말아요. 단독 입찰이었는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유찰 끝에 이것 역시 삼일회계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지분 매각주관사를 맡겠다고 했을 때 따로 팔아야 유리하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삼일이 주도해서 한전과 마사회를 합친 통매각으로 선회합니다. 그 두 주주의 인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통매각을 해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유진은 경쟁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해 놓은 YTN의 기업가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인수를 써냅니다.

한전KDN 1대 주주가 최저 기준가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격 이하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만 기가 막히게 그 수치를 맞춘 듯 인수를 써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YTN은 보도전문채널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돈으로 지분을 시장에서 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방송사업권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 지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유진이 3000억 원 들여서 YTN 지분을 샀어요. 그런데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방통위의 매각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23년 12월부터 진행된 매각심사는 한 달 반 만에 끝납니다. 유진이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이동관의 방통위는 기본계획이라는 걸 의결해요.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 확인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 심사 신청 서류에는 복붙,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흘밖에 가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도전문채널, 30년 공적 파트에 있었던 그 공적자산을 팔아 치웁니다. 심지어는 유진그룹 총수 유경선 회장의 과거 변호인을 했던 이상인 씨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의결에 참여하는데 이 의결에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단 2명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법한 2인 의결임을 법원을 통해서 다른 사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저때 그냥 의결해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자산의 처분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흠결투성이인 YTN 자산 매각이 그 기준,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했다 할 수 없습니다.

유진은 어떤 자본인가?

다음 PPT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의 유경선 그룹 회장, 이 사람은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진그룹은 복권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탈락했어요, 도덕성 때문에.

그리고 저 검사 뇌물 사건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 경찰이 검사도 문제 있다고 계좌 추적하겠다는데 그 영장 신청을 반려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경선 회장 유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석훈—유 회장의 아들입니다—유진기업의 부문 사장이고요 YTN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실세로 평가됩니다.

유경선 회장이 YTN 송년회 한다고 그 내란의 와중에 YTN 사장, 보도국장, 실국장들 죄다 불러 모아 놓고 여사원 찾고 여자 간부 찾고 결국은 여자 앵커를 불러내서 ‘이 앵커 보도국장 시키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나 해 대고, 그 자리에서 YTN 일은 모두 유석훈하고 상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유석훈의 사진은 옛날 사진인가? 저게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업 부문 사장인데도 사진 한 장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진밖에 안 찾아집니다. 챗GPT에 아무리 물어보셔도 유석훈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음습한 기업이 공적자산을 탈취해 갔어요. 거기에 윤석열 정권 정부 각 부처들이 부화뇌동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노종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울산 울주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총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울산 출신이라서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들으셨지요? 아마 예결위에 출석 하시면서도 긴급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지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일곱 분이 매몰되어.....

행안부장관님, 일곱 분 아직 매몰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두 분은 구조가 됐는데 중상인 상태시고요. 일곱 분 중의 한 분은 바이탈 사인을 확인했는데 매몰된 구조물이 복잡해서 아직 구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좀 조속하게, 안전하게 구조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총리님, 경주 APEC 치르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7일 날 취임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7월 4일입니다.

○서범수 위원 7월 4일입니까? 취임식은 7월 7일 아닙니까?

그때 취임 일성으로 국가종합상황본부장이 되겠다, 새벽 총리, 사회적 약자를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신다면,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부족하지요.

○서범수 위원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나를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하실지는 몰라도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관세협상 등에 총리님이 안 보이신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만기친람식으로 국정운영을 하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총리님이나 각 국무위원들이 너무 눈치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회의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국무회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내각의 장관님들이 열심히 토론하시고 또 자기 맡은 분야를 하고 계시고요. 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각 적절하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좀 역할 분담을 해야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2의, 국정 이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몇 번 질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상황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제1동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1동반자요?

○서범수 위원 예, 제1동반자.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특정 개인이 동반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기도 국정감사를 가니까요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정운영의 제1동반자’라고 자칭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앙정부와 교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김동연 지사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협력해야 된다는 취지로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갈라치기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집권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표현하신 것 아닐까, 제가 그 당시의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짐작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혹시 갈라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총리님께서 전체적

으로 통합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범수 위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 사례로 특정 수사팀에 특정인을 합류시켜서 엄정 수사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서범수 위원 세관, 예를 들면 마약 수사 외압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출석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렇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고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특정인을 파견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방향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합동수사단의 인적 구성이 참 묘한 조합입니다. 그렇지요? 김은정 검사장……

○법무부차관 이진수 임은정 동부검사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예, 임은정 검사장. 검찰개혁 5적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분,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파견된 경찰관은 백해룡 경정이라고……

경찰청 차장님 나오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동부지검으로 파견한 첫날 연가 내고 유튜브 출연하고 10월 16일 날 출근길에서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 두 사람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나, 과연 수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님, 수사 잘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수사팀이 구성되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서범수 위원 함께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면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시스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 수사를 하나, 수사를 착수 못 하겠다, 수사 착수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수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시스템 접속 권한 관련해서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범수 위원 경찰도 안 주잖아요. 대검이나 경찰도 안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 차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과견자이기 때문에 과견받은 기관에서……

○**서범수 위원** 그렇게 실컷 사람만 갖다 놓고 수사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만 갖추는 겁니까, 이것?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은정 검사나 백해룡 경정이나 사실은 조직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영웅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는 판을 쳐서는 안 된다. 조직 기강부터 다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기강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잠시 좀 여쭙보겠습니다.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젠슨 황 CEO도 만났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지난 5월 대만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 AI를 발전시키려면 전력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 전력이 해결이 됩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전을 중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 예산의 중심축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급격히 옮겨 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환경부장관님이 관리하시지요, 에너지 관련 예산은?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부차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올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 40%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거의 6.5%. 그만큼 재생에너지 쪽으로 확 늘어 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 데 15년이 걸린다, 그리고 SMR은 아직 기술개발도 안 되었다,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원전 짓는 데 15년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전을 짓는 데 평균 한 7년 8개월 정도 기간이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삼사 년, 사오 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없다는 말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11차 전기본 계획에 따라서 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한수원이 지난 7월에 공고해서 8월에 공모를 받고 10월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공고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수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스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혀 이것 터치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사업자의 의견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네 곳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공식적인 유치 희망을 준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비공식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공모 절차를 개시 안 했잖아요. 다른 데는 다, 네 군데가 지금 공모 절차가 나오면 전부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 스톱을 시켜 버리니까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을 좀 밝혀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언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전력수급 상황,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국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진영 간의 이념 간 논리로 경제 논리와 제발 싸우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AI 강국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력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밝히지를 않는다 이거지요. 로드맵을 안 밝힌다, 지금. 어정쩡하잖아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장관님은 현장에 나가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노동부차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새벽 총리님이 계시니까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벽배송 금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민노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 하는 안건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장관께서는 ‘새벽배송은 이미 필수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산업적 파급력도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민노총이 왜 이런 의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아시겠지만 새벽배송과 관련해서 야간노동이 근로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거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서범수 위원** 명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민노총이 쿠팡을 길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 쿠팡 노조가 23년 11월 달에 민노총을 탈퇴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장관님이 그런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4일 날 당정협의 후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또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차관님이 해석하시기에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일단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안을 제안했고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우려들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 가장 논란되는 부분은 당사자인 배송기사님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93% 정도. 그리고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들도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새벽노동을 하는 다른 모든 직업군들, 예를 들면 편의점, 미화원, 응급실 이런 데는 체쳐 놓고 왜 유독 이 새벽배송에만 지금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왜 쿠팡 택배기사들의 93%가 ‘그건 하면 안 돼. 금지시키면 안 돼’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또 그랬을 때 그것이……

○**서범수 위원** 나름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생계에 부담이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범수 위원**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강권과 생계권이잖아요, 직업선택권.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무 자르듯이 건강권 내지는 직업선택권 이러지 말고 두 개를 다 보호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느냐.

지금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경비원, 택시·버스 운전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서범수 위원** 한 2만 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비가 한 2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21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택배업 종사자 지원 연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택배업계 추산 새벽 배송 근로자가 약 2만 명 내외라고 본다면 한 5%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걸 좀 더 확대하자, 아예. 심야시간에 근로하는 전 노동자 대상 의무지원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이걸 국비로 전액 지원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야간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율 방안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외에도 지금 택배 사회적 논의를 하면서 택배 야간 고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

○**서범수 위원** 한번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한쪽만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두 개를 다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심야 근로는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있고 또 이를 기꺼이 하시려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무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야말로 국민의 주권이지요? 지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총리님,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새벽 택배에 대한 토론과는 별개로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희 챙기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특히 왜 제가 총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리님이 취임 당시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꼭 챙기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새벽배송이 필요한 소비자든 새벽배송을 하는 근로자든 총리님께서 새벽 총리니까 새벽을 지켜 주시는 총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처도 총리실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이걸 책임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공수처장님 나오셨지요?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대참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범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 대상에 검사가 들어가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특별검사는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공수처 차장님 입장에서는 뭐냐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지금 개인적인 해석,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서범수 위원** 저는 특별검사도 검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갖고 있는 공수처에서 특별검사의 범죄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총리님, 지난 11월 3일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정 진술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수진 위원** 윤석열이 한동훈 등 정치인을 말하며 ‘잡아 와라, 내가 총으로 쏘서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등 야당 정치인은 당연히 그보다 우선한 표적일 것입니다.

이 진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그 내용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었을 때는 더 꼼꼼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진술은 윤석열이 김용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노상원이 정치인, 판사, 연예인 등을 수거하고 사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대략 그런 취지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 대통령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 주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80년대로 회귀해서 윤석열로 부활한 전두환의 군부·검찰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법정 구속된다면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와 책무를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것이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상황 내지는 검토할 상황이 되는지 그때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제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엄중

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고요. 지금 팩트시트의 최종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 마무리를 잘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잘하면서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총리님, 연간 최고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국내의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지거나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설비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백지외교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곧 발표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마지막 쟁점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다 된 후에, 우리가 잘된 팩트시트를 기대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하면서 한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출발이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큰 틀에서는 정상 간의 관계 회복이고요. 6건의 MOU가 서로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교류가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소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터놓고 논의가 되었고 또 어찌 보면 부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화 관련한 공연이 서로 논의된, 그러니까 열려진 계기가 된 것 등등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대화하는 그런 토대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TV를 통해서 그 광경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빈 수레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의 한중 관계 파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극우세력의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을 헌법재판소까지 끌어들이면서 한중 관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 측 반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할 말을 충분히 하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대화는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러저러한 과정과 연계해서 또는 그와 별도로 핵비확산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 대해서도—이런 언급을 했는데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은 꼭 중국을 특정하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GPU 25만 장,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26만 장은 실제로 AI 3강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러한 기초가 될 것이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놀라는 것 같고요. 삼성, 현대차, SK 등등은 기존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이걸 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도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한편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랙웰 GPU를 미국 기업에게만 공급하겠다는 발언과 이번 엔비디아 발표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어떤 통제 장치가 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명하신 이후에도 바로 다음 날 실제로 UAE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이런 GPU의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와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국 잘 풀려 갈 것이다, 서로 윈윈이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장관님께서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GPU 예산 관련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 새 정부 출범 5개월인데요. 5개월 만에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AI 대전환 속에서 한국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벼락 치듯이 선두를 향해서 뛰어 나간 겁니다. 대통령도, 내각도, 국회도, 또 스타트업도,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대학교도, 연구소도, 국민들도 모두가 AI 강국, 특히 퍼지컬AI로 세계 1등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리더가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주목한 사람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 라스베이거스 세스(CES) 박람회에서 이제 세계는 퍼지컬AI에 달렸다, 미래는 이게 좌우한다 했는데 1년여가 지나도록 세계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퍼지컬AI를 향해서 달리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번에 삼성 5만 장, 현대차 5만 장, 네이버 6만 장, SK 5만 장, 정부에 5만 장, 이렇게 26만 장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사실 우리 대기업들도 이게 아직 확실히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GPU가 확보됨으로써 이제 확신을 갖고 특히 퍼지컬AI에 관해서 대기업들이 달리기 시작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집중력과 저력이 만들어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3년간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석열 정권은 전 세계 AI 경쟁이 치열한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R&D 예산을 깎았고 GPU 예산은 민주당 거라면서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왜 민주당 겁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GPU 5만 장 확보 공약, 그때도 비웃었지요. 숫자 놀음이라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도 GPU 26만 장 확보를 평가절하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올렸고 최근에는 이를 상회해서 1%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에 대비해서 1.2% 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이 1.2%였습니다. 이마저도 24년 1분기 단 한 차례였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주효했습니다. KDI 발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카드사 매출이 소비쿠폰 지급 직전 대비 4.9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3월 93.4에서 8월에는 111.4로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79.8에서 11월 90.7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민간 소비, 즉 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상승만 일으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2025년 10월 물가상승률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2.4%, 2% 조금 넘습니다.

○이수진 위원 정부는 물가상승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여행·숙박업 이런 쪽에서 조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소비쿠폰하고 연계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은 장마 등의 요인이 있었고 여행 관련한 것들은, 소비쿠폰은 자기 지역에서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연계시키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봐 주시고요. 가을장마, 명절 연휴, APEC이 원인입니다. 물가상승이 오로지 민생회복 예산 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분석은 헛다리 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이제 겨우 살아난 내수경제를 지속적으로 진작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까지 취했던 노력을 더 하고요. 아주 사소한 예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 산재해 있었던 소비진작 노력, 페스티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다 하나로 모아서 그랜드 페스티벌이라는 형식으로 실제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 중기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노력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촉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을 다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 위원 총리님,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시기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진 위원 3%가 되려면 어느 시기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대선을 치를 때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었던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수진 위원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현재 지난 몇 분기 만에 처음으로 반등이 돼서 이번 3분기에 1.2%로 올라갔고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2%, 잠재성장률대로 올라가고 우리가 임기 말까지 최대한 노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2%대 후반, 3%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하여간 성장률 수치 이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3%까지도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AI 대전환 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선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터보엔진을 달아 주는 투자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터보엔진 달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성장·민생회복에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총리님, 경주 APEC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불발됐지만 북한도 상당히 고민한 정황이 보입니다. 내년 3월 북미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북한 측에서도 몇 가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러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고, 내년 3월을 말씀하신 것은 내년 4월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시아를 방문하는 시기와 연동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양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기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의와 미국 측의 수용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내부 검토에서 시작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공식 추진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 첫 성과를 이뤄 낸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소형원자로 설계 기술 등 여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저희 재래식 잠수함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몇 가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더 한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잠수함 건조 비용, 시간, 운용의 문제로 보면 재검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게 미국에서의 건조 아니겠습니까? 계속 추가 협의도 진행하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당연히 이것은 국가 아래서 범정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역량을 종합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김용만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법무부차관님, 장관님께서 지금 이석 중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지금 법사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계십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 대신해서 차관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친일과 재산 환수법이라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서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했던 재산을 국가로 다시 환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이지요, 5년 뒤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기간을 설정을 해 났기 때문에 10년까지 활동을 한 건데요. 그렇게 해산이 되고 한 15년 동안 사실상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 활동이 전면 중단이 됐던 거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광복회를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이 친일 파가 은닉한 재산을 소송을 걸고 보고를 하고 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소송이 유보가 되면서 전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도 이 소송에 대한 진행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바뀌 나가는 것을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는 달랐습니다. 일제 황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친일파 이해승이라는 사람의 후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과거에 팔아 버린 땅, 이 대금이 약 한 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부당하게 판 거기 때문에 소송에 착수해서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를 배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아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관님, 지금 이미 매각이 됐던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환수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회가 됐든 민간단체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 이것을 환수를 해야 된다, 다시 국가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용만 위원**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것, 법무부에 조치를 해 달라고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출받아서 소송 여부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잘못 매각된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하겠다는 그 의지처럼 이 동력을 잃지 않고 더 확장되게, 분명히 이미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맥락에서요 국유재산 관리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님과 그리고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훈부장관님께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부총리님, 대통령님께서 11월 3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왜 그런 지시를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소중한 국가자산이 헐값 매각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매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또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게 매각이 돼야 되는 거겠지요, 관리·처분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갖고 온 것 또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과 재산 환수와 관련된 소송을 아예 손을 놓았고 매각 원칙이라는 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히려 친일귀속재산을 친일과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 후손에게 매각한 것도 문제인데요. 원래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팔 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이란 걸 통한다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해 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단으로 국가 토지를 점유했던,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이것도 보고받으셨나요, 수의계약 이런 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받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국가 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변상금을 낸 사람이 총 18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18건이 다 친일귀속재산인데 수의계약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과 후손에게 되돌아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캠프에서 24년 10월에 매각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이런 무단 점유자에게도 수의계약을 유도하게 된 거예요.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유재산법이 기재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캠프가 무단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거 이거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뭐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실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17호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각률을 그냥 무조건 높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지요. 왜냐? 해당 재산이 친일과 재산 환수법이라는 것에 따라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친일귀속재산의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신중성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친일파로 하여금 잘못되게 획득한 재산을 국가가 뺏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법률이 그런 범위까지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친일파에게 재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거는 그 특별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매각이 돼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친일재산이라고 하는, 잘못 획득을 한 재산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입을 해 오는 행위로 하여금 명분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되찾기도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행정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또 국가 재산에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는 결국은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고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에도,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최고 책임자가 결국은 부총리님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수정을 하거나 이 원칙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지금 친일재산뿐만 아니고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 상황이나 그다음에 매각 의도라든지 매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개선 방안도 만들고……

○김용만 위원 매각 의도보다는 지금 보면 매각 절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용만 위원 이어서 보훈부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일과 후손이 불법 점유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되사 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과 재산 환수법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공감합니다.

○김용만 위원 이렇게 환수된 친일재산에 대해서 캠프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및 매각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처음이 아니고요. 24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과 후손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내용도 이미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보고받았고요. 참고로 친일 매각, 친일 귀속 재산이 25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한 842필지입니다. 그중에 기조사가 된 210필지를 제외한 63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전수조사가 되어야 다시 친일 후손들에게 재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전수조사하고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요, 진짜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의원실에서 보훈부에다가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친일과 후손에게 재매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매각이 됐을 건데 그러면 24년에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관계 등을 직권으로 확인할 권한이 없어서 매각자에게 친일 후손이 아니다라는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악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인지가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친일 후손이 아니다라고 각서를 씁니다. 쓰고 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없습니다.

○**김용만 위원** 없습니다. 이거 매각자가 그냥 거짓으로, 허위로 그냥 이 각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손임이 밝혀져도 보훈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건데 보니까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각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다’. 글쎄요, 이게 저는 최소한으로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매각할 당시에는 친일 후손이라는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친일 후손한테 재매각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친일재산매각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작년에 이게 구성이 되고 설립이 된 다음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아마 이제까지 그 후손이…… 재매각되는 물건이 친일 후손한테 재매각된다는 것이 전혀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김용만 위원**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누군가가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훈부 쪽에서 그래도 좀 파악을 하고자 해서 친일과 후손 재매입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118필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업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완료가 됐을 때 이 부분도 장관님 보고를 받아 보시고 저희에게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 118필지 중에 친일과 묘가 있거나 친일파들의 후손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점거하는 것에 있어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건축물, 무단점거를 하면서 토지에 있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서 실제 무단점거에 그 위에 시설물까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변상금 부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런 특별지시를 내리신 데는 이런 이유도 저는 분명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 그건 보여 주기 식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겠지요. 새로 오신 보훈부장관님께서서는 저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친일재산 환수 소송의 경험이 법무부에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행안부를 통해서 가족관계, 그러니까 진짜 친일과의 후손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조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불법시설물들에 대해서 철거나 강제퇴거명령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친일재산매각심의위원회 이것도 가동이 다시 되어야지요. 다시가 아니지요, 사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가를 배신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그 후손들에게 재매각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은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친일파들로 하여금 회수한 재산들은요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해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획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게 결국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분들이 잘살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자 방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친일파 토지매각 실적을 보면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의 6.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캠프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보훈부가 조금 더, 위탁을 맡긴 다음에 그냥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매각 방식·절차, 아까 기재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내용을 같이 들여다봐 주시고 유공자분들 후손에게 이 회수한 친일파의 재산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 재원 확보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형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부총리님들,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8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자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외환위기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국가, 현대국가에서는 국정과제가 복잡해지고 또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통해서 선출된 저희 같은 선출직들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료주의 연구로 유명한 막스 베버는 관료들, 공직자들이야말로 근대국가를 지탱하는 지혜의 집단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국회야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큰 재정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경제부총리는 탄핵의 위협 앞에서, 여당의 대표가 탄핵 위협을 하는 데서 국고를 지켜야 된다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삼권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재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재정으로 우리 동네를 윤택하게 살려 주길 바라고 또 많은 재정으로 여러 공백을 메워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유한하고 그건 또 누군가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 국무위원·정부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재정, 후세에 빚을 떠넘기지 않은 예산 그리고 물가와 금리 부담을 서민들과 기업에 떠넘기지 않은 재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법의 지배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행정과 권력의 집행이 공평하게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법의 지배라는 원칙으로 지켜야 됩니다.

총리님, 일각에서는 ‘국회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님은 우리 정부의 내각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번에도 유사한, 지난 예결위 때인가 본회의 때인가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삼권분립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언명은 결국 그 모든 권한의 출발이 국민에게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최형두 위원 국민주권이지만 그러나 한시적 임기를 가진 총리님도 국회의원이고 저도 국회의원이고, 대통령도 한시적 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직자들, 여기 계시는 정부위원·국무위원들은 비록 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속가능한 영속성의 바탕에서 하나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거의 승패로 특정 정당이 집권하고,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권분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법 독립이 중요한 겁니다.

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제 예산·기금운용 공청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안 계셨겠지만 5명의 경제학자가 굉장히 유익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거 긴축하지 말고 재정 확대해도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혹시 경제부총리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어제 어떤 학자가, 어떤 전문가가 ‘긴축할 필요 없다. 재정 확대해도 관계없다. 크게 확대재정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줄 혹시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그 취지 자체는 지금이 대전환기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은……

○최형두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반도체 특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매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부총리님, 그때 초과세수가 얼마였지요? 2017년에, 2018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때는 많이 생겼으니까……

○최형두 위원 한 100조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학자도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좋고 HBM 또 젠슨 황…… 여러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동영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I 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정말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국가재정이 기업의 수익에 의존한다면 그러면 국가재정을 그냥 부차적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복지를 키우는 것에서는 재정의 역할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으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 GPU 지금 몇만 장 구입한다고 하는데 메타나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몇십만 장씩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가재정으로 다 쏟아부어도 다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예컨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GPU를 구매를 하는데 그거 국가재정으로 구매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재정 못지않게 기업들이 일하도록 하고 우리 혁신생태계의 혁신가들이 무슨 엉뚱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이 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정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재정 확대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민간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노력이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국가부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는 국가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것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프랑스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프랑스가 국가부채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다음 보시지요.

프랑스 그리고 드디어 미국까지도 이제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빛의 속도, 어제 우리 공청회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던 것도 너무 지금 적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가재정이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

그런데 부총리님, 이 브레이크를 어디서 잡으실 겁니까? 브레이크 잡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저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국가부채를 걱정해서 재정 규모를 너무 줄이다 보면 진짜 대전환기에 또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이 지금 우리 반도체 잘 되면 100조도 생긴다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만으로, 이제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 재정 중복된 거 또 실제로 그동안 재정의 투자 실적이 낮은 거 다 가려낼 겁니다. 가려내서 하겠습니까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선진국들은 빛을 줄이고 있고 이미 빛이 많은 나라는, 영국·프랑스조차도 또 미국조차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데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국제신용등급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부채 비율은 어느 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신용평가사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요.

○**최형두 위원** IMF 때는 얼마라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 60%……

○**최형두 위원** 60%라고 그랬습니다. 60%가 언제 도달될까요, 우리는? 60% 이내로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요 어쨌거나 재정이 늘 확장을 하되 성과를 내서 지금 우리 반도체 못지않은 그런 것을 몇 개 만들어 내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대전환기니까 재정을 늘리되 좀 성과를 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좀 중심에 서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이 떨 수가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또 무슨 52시간 규제요?

부총리님이나 경제부총리님이나 특히 경제부처의 장관님들은 좀 큰소리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거 좀 바뀌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장관님들 계십니까?

아니, 재정으로는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도 하면서 혁신생태계를 만나 보면 이분들 이야기가 혁신 또 AI 이런 새로운 기술에서는 소수의 정말 창조적인 사람들이 인구 1000만 명, 2000만 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입의 순간이라는 건 단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특히 이분들은 굉장히 고수익자고 그런 연구성과에 따라서 수많은 수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총량을 예컨대 너무 인터벌을 일주일 단위로 두지 말고 한 달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옥매어 가지고 재정으로 다 하려고 하니 재정보효율도 떨어지고 빛의 속도로 저렇게 빛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못지않게, 이번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규제 효과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부총리님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총리님께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국의 시각으로 보자는 말,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글로벌 제국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지만 누구를 침략하지 않고도 우리는 제국이 되어서 문화의 제국이 되었고 또 국제경제에서도 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국의 시각으로 우리 규제도 혁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규제위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52시간제 이것 다 규제 혁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꼭 거기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거기에 연계시켜야지요.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걸 피하고 어떻게 이야기 하십니까? 총리님, 재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우리가 선진국 중에 제일 빠릅니다, 지금. 60%, 부총리님 장담하십니까만 이렇게 하면 못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음 순간 우리 국제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정말 외환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넉넉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넉넉하다 그런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상황상 한 4000억……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요 경쟁국 대만보다 외환보유고가 적은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에 또 TSMC 상황 때문에 아마 더 많을……

○최형두 위원 더구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연 200억씩, 물론 그건 무슨 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만 200억 달러씩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이 굉장히 위기일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

부총리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외환보유고는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외환보유고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다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도도 그래도 저희들이 더 성장을 좀 한다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서도요. 4100불도 넘어가고 이렇게……

○최형두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

들이 AI 특수를 이용해서 정말 규제를 좀 뚫고서 이 사람들 일 좀 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 지으려 그러면 전력 공급이 또 풍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력 공급도 좀 풀어 주고.

원안위원장님 계시지요? 지금 자꾸 미국 같은 경우는 스리마일 아시지요, 스리마일,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최형두 위원 미국에서 원전 사고 났던 데입니다. 그 스리마일을 최근에 가동하고 있지요, 다시?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다시 가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는 왜 지금 원안위에서 운전 심사가 계속 지연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기술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는 원안위에 늘 강조합니다만 정치권 눈치 보고 혹시 권력 있는 분들의 심기 거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데이터도 부족하고, 데이터는 퍼지컬 AI에서 우리나라가 제조 데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과 경쟁을 할 만합니다. 인재도 키워야 되고 또 GPU는 우리가 안 되면 국제적 협력을 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단가가……

산업부장관님, 전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요 경쟁국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저희 전기 가격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높은 편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전기 가격은 높고 규제는 많고,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달라고…… 기업이 재정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규제를 풀어 주고 인프라만 제대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장관님, 부총리님 또 총리님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규제를 혁파하셔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정말로 이게 지금…… 아니, 재정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이것 조금 늘렸는데도 지금 국가부채 비상이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빨리 빚이 느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렇게 하면 또 이 정부 5년 기간에 600조가량, 500조가량의 부채가 쌓일 건데 그 부채는 누가 갚습니까? 총리님 재임 기간 중에 몇백조의 빚이 쌓이는 것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은 성장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학자들의 말씀이 ‘지금 재정 긴축 이런 걸 하고 재정 확장 이런 논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올해 반도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까 우리 재정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 규모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돌도록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
서 연구혁신 생태계가 정말 밤새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같이
영똥한 파업으로 발목 잡힐까 걱정하지 않게 하고, 이것만 해 줘도 국무총리님 앞으로
광복 80년 이후에 정말 참 청사에 남는 명재상이 될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다음에 저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재정으로 지역에 뭘 많이 해 주시는데, 오늘 경상남도지사님이랑 경상
남도 의원들이 예산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무슨 기금 같은 걸 예컨대
소비쿠폰이라고 내면 지방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 부담이? 이 지방 부담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완수 경남지사 말은…… 아니, 경기도야 지방재정이 넉넉할지 모르겠지
만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나중에 지방에서 40%다 10%다 매칭을 시키면 그만한 돈이,
지방재정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 낮은 데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역의 부담을 줄여 주고 좀 나은 지자체는 조금 부담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형두 위원 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경상남도 경제입니다,
자동차 수출. 또 앞서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한 번 큰 충격을 겪었고 지금
기계공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남의 산업 그것이 마스가의 기본이 되고 또 피지
컬 AI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다 보상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인센티브나 규제 혁파 또 재정을 그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
록 부총리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은 저희들
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대전환기에 정부가 좀 할 일을 하면서,
초혁신 경제라든지 AI 대전환 쪽에는 저희들이 재정을 넣다 보니까 기업이 모이더라
고요, 각자 각자 하던 게. 이게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성과를 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경남지역에 관해서는 오히려 마스가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지역경
제에 플러스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이고 아주 생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수도권으로부터 먼 경남뿐 아니라 전북, 광주, 전남 이런 데도 골고루
살피셔서 우리 발전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했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16대 국회에 들어오셨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왔고 긴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20년 만에 다시 재선의원이 되고 지금 3선이 돼 계십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제가 4선인데요.

○이성권 위원 아, 4선. 죄송합니다.

어쨌든 20년 만에……

○국무총리 **김민석** 15대, 16대 했고 중간에……

○이성권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2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20년의 공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하나가 비슷한 점은 80년대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였고 저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민석 총리님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시대정신……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이 위원님 늘 존경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양극화, 극단화되어 가지고 상호 서로 도와주는 보완 기능보다는 거의 검투사들의 전쟁터처럼 정치권도 그렇게 돼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분열돼 있는 그야말로 통합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통일부장관으로, 정동영 장관님도 저 17대 할 때 같이하셔 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도 총리도 또 장관님이나 정치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국론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영의 입장에서서 반대편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넘겨 주시면요.

사실 이게 영상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달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예결위장에서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한번 일단은 돌려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소리는 안 납니다. 저게 강원도에서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입니다. 9월 12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영상을 한번 보면 여기는 7월 18일 날 부산시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던 때입니다.

대통령의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점을 직접 귀담아듣고 또 그것을 해결해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부분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소리는 안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앞의 부분에서 보면 강원도 도민들이 지역의 현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는데 강원도지사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소리를 들으면 더 적나라합니다만 ‘이 자리는 대통령과 도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가지세요’ 하고 그냥 물리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의 현안 사업으로는, 해수부장관도 앉아 계시지만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인데 그 질문을 시장을 지목해서 저기 마이크 든 분이 부산시는 해수부 지원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마이크를 들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께서 ‘다음에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을 한번 봐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이것은 광주에서 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얼굴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마이크를 들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무안군수도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국민 통합을 시켜야 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태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은 마이크 기회를 주고 특정 정당은 주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외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총리님은 행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지만 국민 통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같이할 수 있는 장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 판단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 때의 상황과 그 세팅 자체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기준과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굳이 저것을, 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대전시장은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베이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취지만 받아들여서 정국, 국정을 운영할 때 대통령부터 그 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리님이 중간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그냥 그걸 그대로 하고요.

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니까, 지역에서 정당이 다른 입장의 단체장이 모임을 할 때 제가, 국회의원이 가도 거기서는 아예 발언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른 일종의 루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취지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다음으로는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행정부 자체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윤호중 장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조금 리마인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총리님한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를 한번 봐 보시면,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했고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꼭 집어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화수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시키는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은 행안부의 지시 전에, 40분 전, 55분 전에 미리 그걸 전달을 했다, 그래서 부산시와 그리고 서울시가 내란에 가담된 혐의를 갖고 있다, 부화수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윤호중 장관께서 9월 12일 날, 이틀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 내란특위와 관련해서 행안부 자체 감찰단의 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서 밑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특검대응특위(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속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민주당이 감찰단 구성을 요구하고 10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다음 이틀 뒤에 행안부장관께서 폐북에 내용을 올리고요 22일 날 돼 가지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 예정과 관련된 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단을 보내서 3일간, 4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주당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답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가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떠한 지형을 바꾸기 위한 정당의 요구에 행정부가 같이 따라간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각 광역단체 전체에 다 연락을 하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 12월 3일 날 23시 12분부터 23시 30분 안에 다 연락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나와 있지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 빨간색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간 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서울시가 특별하게 빨리 반응하거나 그런 게 일도 없어요. 똑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혐의점을,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건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 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부가 바로 이걸 받아 안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당일 날 부산시의 당직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동녹음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당직자가 연락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란과 관련된 정보나 인지도 전달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저기 나타나거든요.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니까,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 지시를 따랐다는 게 문제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언론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시면요 불법 지시에 따른 게 문제라는 인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부산시와 서울시만 그렇게 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체에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광주광역시, 밑에 빨간색으로 해 놔거든요. 청사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근무인력 추가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출입자 확인 후 출입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청사 출입문 폐쇄, 소속기관 및 시군에 전파까지 다 내립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똑같습니다. 다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광역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에 대고 해명을 했던 부분도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아까 제가 말한 요즘에 제가 느끼는 화두,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인데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갈라치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면요.

광역단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시다만 행안부 산하의 정부청사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청사들이 다 똑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요구한 부화뇌동이라는 것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총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적어도 미래세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은 하나 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아쉽게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걸 너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

그다음, 시간이 제가 원래 하려는 것보다 절반도 못 한 상태인데 짧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소소한 디테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 사안을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저 사안에 대해서 광주에서 좀 달리 대응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그에 대해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저 내용의 가부,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100% 맞느냐를 떠나서 제기해 주신 그 취지를 제가 깊이 생각하고 당이든 또는 정부에서든 그런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 문서는 저희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자료 요구를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와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의회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크게 보면 의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 쟁탈을 위해서 싸우는 정당들이 의회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정당정치의 관점으로도 볼수지만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용광로처럼 녹여 내는 통합의 공간으로 의회를 생각을 합니다.

PPT 그다음 것 보시지요.

총리께서 정치인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놔는데 제

가 17대에 경험을 해 봤던 또 제가 17대 국회의원 되기 전 15대 때 국회의장을 하셨던 박관용 국회의원 밑에서 비서관 생활 4년을 하면서 의회 경험을 과거로부터 축적을 해 봤는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회의 모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선출할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상임위의 간사를 정할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정당이 추천한 간사를 배제를 시켜 버린 다든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리고 발언 하나 가지고 제가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행태 부분인데, 법사위원장이시지요. ‘태도를 봐 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런 발언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발언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당연히 보장돼 있는 건데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시혜를 베풀 듯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 보면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해 왔던 한 달간의 박탈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의 의견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마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며칠 전에 사실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 본회의장의 일부가 비어 있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정치적 소신 중의 하나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차라리 가나다순이나 지역구별로 그냥 섞어 앉으면 어떤가 하는,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형식이 경우에 따라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런 아쉬움이 극복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제가 지금은 당에서 정치를 하는 쪽이 주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든 또 언제 시점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리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총리님 상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대한민국이 AI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 세계가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그런 시대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좀 상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전기충전소로 도착을 합니다. AI 비서가 알아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화폐로 자동 결제가 되겠지요. 충전소 운영자가 전자지갑에 입금이 됐는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확인이 됩니다. AI가 물건을 사고 블록체인이 이것들을 검증·기록하고 디지털화폐로 거래하는 세상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총리님, 저는 한국이 세계 미래 금융시장에서 자주성을 지키고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우리만의 코리아 블록체인, 코블로(KoBlo)가 반드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신 건 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때도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강일 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버린 블록체인, 소버린 AI, 코블로, AI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슈퍼 카드입니다.

‘이게 돈이 돼? 그게 밥 먹여 주냐?’, 3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에 인터넷을 깔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었던 냉소적인 얘기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대한민국 GDP의 40%를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슈퍼 인프라를 바로 인터넷이 담당했지요.

제가 코블로를 만들자고 했더니 똑같은 질문이 옵니다, ‘그게 돈이 돼? 정부가 나서야 되나?’. 대답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블로가 국부가 됩니다.

표를 보십시오.

요즘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조 수준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보다도 큼니다. 물론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올랐을 때는 더 컸습니다. 전 세계의 게임이나 NFT, AI, 금융 결제가 매일 15조 원, 160만 건의 트랜잭션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갑니다. 한국 경제 규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용자들은 가스비라고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1년에 4조가 넘습니다. 코블로가 이 수조 원의 사용료를 한국 국부로 끌어오는 그러한 황금 티켓이 된다는 겁니다.

산업계 만나 봤습니다. 혁신기업들이지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계도 만나 봤습니다. 모두가 AI하고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남의 블록체인 위에서 할 겁니까? 왜 우리 블록체인에서 하면 안 될까요? AI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 근본 인프라를 가진 국가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장만 굴리는 그런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기 힘듭니다. 데이터와 거래를 기록하는 소버린 블록체인을 가진 나라가 아마 주도권을 갖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지요. 거래가 세금이 되는 디지털 국부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 달리면 통행료가 착착착 쌓입니다. 코블로를 많이 쓰면 대한민국의 국부

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블로 위에서 거래하고 K-스테이블코인이 결제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경제의 허브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이미 시작됐지요.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망설일 때이기보다는 선점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인터넷이 우리를 IT 강국으로 만들었다면 코블로는 AI 시대 데이터·금융을 엮는 AI 초강국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소버린 블록체인 너무 얘기들 안 합니다. 소버린 AI 연장선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적 미래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블로 범정부 추진단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한 검토, 관계 부처의 협의, 좀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는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소버린 AI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좀 더 넓게 퍼져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소버린 블록체인 문제는 제기해 주신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이강일 위원 더 약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직 폭넓게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일 위원 아직 정부 측에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급해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가담자 대부분이 지방 출신의 이삼십 대 청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를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본 위원은 이게 청년 일자리, 특히 지방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요. 보면 500대 기업 본사 중에 80%가 서울·수도권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충북은 1%도 안 되는 네 곳만 있어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고용률 차이도 자꾸 굉장히 커지게 나타납니다. 24년도 보니까 수도권은 거의 50%고요, 비수도권도 4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윤석열 정부 당시에 청년 일자리 정책,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부 주요 청년 지원사업, 수도권에 60%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별 운영 편차도 굉장히 심각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재정사업을 지방 우대하겠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큼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다시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요, 지방 청년을 우대하고는 있는데요 이를 활용할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높은 AI 관련 훈련 과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훈련받으면 4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

방에 교육 인프라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강 예정인 AI 훈련 과정이 총 395개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253개, 64%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충북 3개입니다.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들으려고 수도권으로 또 이동해야 합니다. 지방 혜택 포기하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 핵심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 어떻게 극복합니까? 가속화되겠지요. 제2의 캄보디아 사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더 펼쳐 나가고, 특별히 지금 지적해 주신 AI 관련 지원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 자체가 부족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AI 관련한 집행을 해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신 경제부총리께 말씀드리어서 이것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챙겨 가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흡족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기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4000명 넘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계 추정으로 감춰져 있는 숫자까지 하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증명서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주민등록번호 부여되지 않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강일 위원 이렇게 되면 보육·건강·교육, 공공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은 정치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고통 이게 국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장관님은 예결위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관한 질의에 ‘외국인의 기본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진척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해 갖고 네 분 의원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데 논의 진척이 없어 갖고 제가 금주에 법사위원장님 방문해 갖고 이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을 포함해 갖고 10개 법사위의 중점 법안을 선정해서 또 오늘 원내대표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꼭 좀 처리해 달라고요.

○**이강일 위원** 적극적인 노력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가능한 한 이번 정기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무부가 2018년에 제정하고 올 3월 20일에 연장한 불법체류 아동의 인도적 체류허가지침, 이 신청 요건을 좀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이하로만 한정되어 있는 체류허가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사실 확인 요건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체증빙까지 인정해 주시면 법률 제정 전이라도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화와 공공서비스 접근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의 품격은 강자의 목소리보다 약자의 고통에 국가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본 위원도 가슴이 참 뿌듯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제도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비수도권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강일 위원**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청주시 원도심에 성안길이라는 큰 곳이 있는데 1500년이 됐습니다. 거기 상가가 있는데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통계상으로 33%, 사실 내용상으로 50%가 넘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상업·교통·금융의 허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들이 개발이 쉬운 신도시로 나가면서 완전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유서가 깊을수록 공동화는 훨씬 심각합니다. 여기는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옛날 유적도 나오고 용적률 막 줘서 대단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보니까 2차 수도권 공공이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수도권 원도심으로의 이전 논의나 감안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정주여건이 주변에 좀 완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인프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외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청주시 원도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년의 전통에서 나오는 국가유산도 풍부

합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장점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조업 관련 공공기관은 아니겠지만 서비스·금융 분야, 이런 분야의 공공기관은 지역의 중소도시 원도심에도 이전하는 것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리님, 비수도권 원도심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 이전을 활용하는 방안 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어차피 이제 검토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어떤 기관을 이전하냐 하는 문제에 보통 초점이 가 있었는데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에 있어서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 얘기가 일리는 있게 들립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감안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강일 위원 장관님, 부탁드려야 되는데.

요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위험 대응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고 속상합니다. 충북에 한 곳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도 지역 중에서 충북만 유일하게 한 군데도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주도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아, 그렇군요. 두 군데가 없군요.

1차 심사를 통과한 옥천군도 결국 선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충북에서 기본소득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정말 유감입니다.

옥천군은 이미 기본소득 테스트베드에서 행정 경험을 충분히 축적을 했고요. 24년 지역화폐 발행액도 864억이나 됩니다. 군 단위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지요. 그다음에 옥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꿈키움바우처 사업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구요. 기본소득 모범사례 지역이거든요.

장관님, 예결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옥천군 추가 지정 포함해서 예산도 사업 내용도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들었고요.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강일 위원 충북 홀대론 얘기 다시 안 나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국토부장관님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비수도권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권이 특히 철도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제 지역 충북은 더 열

악합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등 주요 거점을 30분 내에 이동 가능한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저희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KDI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타당성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차입니다. 정부가 BTL 한도를 8월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좀 늘어지는 바람에 BTL 한도를 결정한 8월 이후에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걸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졌을 경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산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 BTL 한도에 꼭 본 철도사업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릴 건데 이것 반영 검토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민자적격성조사가 최근에 통과한 걸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런 것들 포함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예산에 있어서 한 번 더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강일 위원 오늘 답변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총리님, 통일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대법원 입법처장님.

제가 처음 이걸 다뤄 봐서 그렇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만 많이 했으니까 여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입법처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돌리지 않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시대의 조류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저희들은 늘 열린 자세로 국민에게 좋은 사법접근권,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병진 위원 주권재민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고 믿습니다.

○**이병진 위원** 대법원에서 혹시 사법개혁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해 본 게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미친한지 몰라도 거의 반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조사는 61.1%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병진 위원**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아무쪼록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제정적이라고 이렇게 추단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제정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제가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많’은 많은 재판, ‘제’는 제한된 시간, ‘정’은 정해진 예산, ‘적’은 적은 인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쉽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 늘 이병진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병진 위원** 결국은 우리 국회와 잘 협의를 해서,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고 수렴되거든요. 그게 현명한 자세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평택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반에서 1·2등 하는 애들이 법대 가고 S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스마트합니까, 우매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세계 사법기관에서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법관이 되어서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생각하에 법관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적 조류가 닥쳐왔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하에 백안시하면 된다, 안 된다? 평대한 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백안시하면 된다, 안 된다? 백안시, 이런 제안들을 배제하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죄송합니다, 말씀 못 알아들어서. 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저보다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백안시하면 안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병진 위원** 이렇게 집권여당에서 열의를 갖고, 진정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데 국민에게 권위를 위임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말이지요 ‘이때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낚아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시점 또 언제든 사법개혁은 늘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적 과제, 국민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저희들이 다가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을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처장님을 뵙고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법률용어로 가득한 이 판결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차제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실천해서 개혁의 일환으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똑똑한 법관님들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법관들은 자신들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하에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서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백문이 불여일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담, 그러니까 백 마디 말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고 백 마디 말을 들어도 직접 얼굴과 표정을 읽으면서 답소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모 TV에서는 백문이 불여일담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당대의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일생을 다 들어 보고 그분과 담화해서 그분의 정수를 빼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사님들이 똑똑하지만 요새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병진 위원 이게 일방성은 사실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교수 생활도 적지 않게 했는데요. 쌍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판사님들이 다 같이 오프라인 교육 장소에 모여서,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나한테도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교류의 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매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예를 들면 저희 사법부 연수원에서 연 70개 정도 강의를 열고 있는데 그중에 4개 정도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법관들이 참석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특히 형사부에 계신 분의 오프라인 교육은 더욱더 요망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상대 법관을 통해서 순간적인 감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항상 자기가 깊이 빠지다 보면 어떤 자극 하나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망외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더욱더 치중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병진 위원 논리가 수미일관되고 똑똑 떨어져서 제가 아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2만 2000명 정도 되는 법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3250명 정도 법관들이 있고 그래서 독일에 비해서는 업무 부담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민생 사안에 직결된 재판을 매일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 동안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하는 그런 재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법관들 증원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서 참여하고 숙의하고 마주할 때 말씀합니다. 마주 보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피하지 말고요.

그래서 순리는 뭐다? 하급심 판사님부터 증원이 돼서 상급심, 대법원까지 판사님이 늘어나야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5168만 4564명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제가 추단한 사법개혁의 첩경은 뭐였다? 사자성어요, 뭐였다? 많제정적. 정치적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병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제가 제의드렸던 법관들의 연수 비용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것도 두루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중론은 참 성공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봐도 대부분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중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장관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공직자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APEC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번을 경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고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까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이 십여 차례 방문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병진 위원** 틀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저는 성공했다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거의 적대화 초기 단계에 들어갔던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외교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두 건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바로 고려시대 서희의 강동 6주 담판 그리고 조선시대 광해군의 명칭 대립 간에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중립외교와 실용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당시 조선의 이익을 취했던 이 두 가지 사례가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두 사례는 다 탁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특히 동영주, 완주, 계림주, 참주, 유주, 경주, 지금의 요령성 일대, 저 만주 일대를 갖고 왔다는 것은 고려 성종 때 서희의 대단한 업적으로 역사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가짜뉴스가 지금…… 우리 외교의 산물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PPT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중회담 아닌 중한회담, 왜 (中) 먼저 표기?’,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너무나 심하지요.

또 사진 한번, PPT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배경에 왜 중한 원수회담이라고 병기했냐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제가 차제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1년 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제8차 중일한’이라는 글자와 더불어 밑에는 ‘서울’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봤습니다.

○이병진 위원 보입니다. 그렇지요? 앞에 악수하고 계신 분은 윤석열 씨고 그리고 등이 보이는 분은 리창이라고 하는 중국 총리입니다. 그렇지요?

사진을 더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PPT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어로는 ‘한·일·중’, 일본어로는 ‘일중한’, 중국어로는 ‘중일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병진 위원 공식 행사명 표기는 저렇게 외교적 관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때는 영어로 ROK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한국이 왜 앞에 나왔느냐라고 또 트집을 잡아요.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그렇지요? 저기도 ROK 나왔습니다. 저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하하고 험중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국익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사실에 맞지 않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이것은 저해됩니다.

제가 적지 않은 중국 친구들을 만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을 안다, 중국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손바닥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중동은 동시간

에 중국어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발가벗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 내부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사관 앞에 가서 자기 최고 존엄을 모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들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지 한번 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앞에서 기타의 나라가 우리의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문구 쓰고 비판한다고 하면 우리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관례가 아니냐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PPT,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중 경제인 오찬 간담회’ 위에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중한경제계’ 그렇게 돼 있네요.

○이병진 위원 중국 말 잘하시니까 한번 중국 말로 읽어 보세요. 총리님은 세계 최고의 대학 칭화대학과 케네디스쿨에서 디지털 패권 싸움하고 있는 두 나라를 다 정복하신 분인데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한번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한-중 경제통상협력포럼,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보세요.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씨가 중국에 그렇게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여덟 번째 볼까요?

2022년도에는 말이지요 이런 글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실패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립이 돼 가지고, 고립돼 가면서 점점 혐오 세력들과 결탁하게 됐습니다.

보충시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 충주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입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늦었지만 APEC을 계기로 해서 타결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APEC을 위해서 수고하신 총리님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타결까지 참 고생들 많이 하신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타결이 됐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부담할 3500억 불 또 우리가 구입할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민간에서 직접 FDI 할 1500억 불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비 예산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3500억 불, 민간 FDI 1500억 불만 합쳐도 5000억 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700조 되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가재정에 어떤 문제가 될지 또 외환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국민이 궁금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보면 협상의 주체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상무장관, 재무장관이 나섰는데 우리는 협상 주체가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님, 위성락 안보실장님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장관님,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안 하고 대통령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메시지가 엇갈리고 혼선도 있었다. 통화스와프 협상 둘러싸고서도 그런 메시지가 좀 엇갈렸고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도 김정관 장관님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위성락 실장님은 아마 다른 데서 또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겉에는 안 나서고 아마 배후에서 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릴 정도로 또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우리가 총력을 다했다 하는 그 힘쓴 표현을 나중에 하셨는데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실장들이 대신 뛰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방미 시에 같이 가서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표출하고 또 타결되면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까지 하면서 비서실장이 주역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출마합니까? 총리님은 아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너무 과하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하신 상상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전 같으면 비서실장이 전혀 언론에 이렇게 표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출되는 것 보니까 이게 무슨 꿑꿑이속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저희가 관세 협상을 놓고서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대로 또 저는 저대로 이렇게 각각 보완하기로 했는데,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 있고요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기는 하셨는데 그전 비서실장에 비해서 과도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실 때는 비서실장은 국내에 있었거든요. 이게 전례,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볼 때 좀 그렇지 않나……

총리님,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하도 여러 번 여쭙보셔서,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국무총리 김민석 이게 꼭 나가라고 하시면……

○이종배 위원 아마 남이 안 떠다밀어 줄까 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 김민석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관세 협상의 형식 관련해서 이번 협상의 특징이 공동성명 없고 공동합의문 없고 공동기자회견이 없는, 합의 입증 문서가 없는 그런 협상입니다. 한미가 각자 발표하고 타결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국민들은 타결됐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발표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발표하는 대로 믿고 미국은 아마 미국이 발표하는 대로 믿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이런 과한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협상할 때도 보니까, 그때 제가 김정관 장관님한테는 상임위에서도 물어봤는데 우리 게 맞느냐, 우리 게 참이나 미국이 발표한 게 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게 참이라고 하긴 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투자액에 대해서도 우리는 직접투자가 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전액 현금이다 이랬고 투자처도 한국이 결정한다, 우리가. 우린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미국은 미국이 결정한다. 그래서 참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 팩트시트……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종배 위원 이게 MOU하고 팩트시트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서명도 각각 되는 거지요? MOU 따로, 팩트시트 따로?

○외교부장관 조현 팩트시트는 서명하지는 않고……

○이종배 위원 서명은 안 하고요 발표만 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같이 동시에 발표됩니까? 따로따로, 시기도 다른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이종배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보면 팩트시트는 금주 내에 된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곧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MOU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MOU는 금주 내에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위원 둘 다 그렇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MOU,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빨리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

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늦는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만 외교부장관님께서 그냥 그런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남 얘기 하듯이 희망한다 해서는 안 되고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채널 총동원해서 각 부처에 설명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까 다른 분 질의할 때 보니까 ‘희망한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답변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답변 좀 잘하시고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종배 위원 강훈식 비서실장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브리핑을 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많이 아쉬운 점은 무엇이에요, 이번에 협상 중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지금 강 실장이 얘기한 내용은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령 이번에 안전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이종배 위원 못 했다?

○국무총리 김민석 우리들의 주도성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의 협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격을 좀 더 명료하게 한다든가, 그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어떻게 제고하도록 반영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상당히 절충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딱 자르듯이 안 된 대목들이 일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게 MOU에 또는 팩트시트나 이런 데 다 못 담길 수도 있네요.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3500억 불 정부에서 부담하는 건데 3500억 불이면 국민 일인당 한 950만 원, 그냥 나뉘어도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고 이게 200억 불씩 계속 내도 10년간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200억 불씩 못 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화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현 정부에서 정부 책임으로 하셔서 안 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이것은 야당에서도 절대로 발목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비준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냥 법적 구속력 없는 MOU다 이랬는데 법적 구속력 없으면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 봐야 안 바뀌게 되는 거지, 미국이 또 관세 인상한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도 페널티 규정이 있잖아요. 이번 MOU에 담기는 것 같던데, 제대로 제때 제 때 못 내면 관세 인상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그 페널티 규정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는 FTA에 대한 중대한 변화거든요, 한미 간 FTA. FTA 때 받았는데, 변화인데 이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상의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은 말씀 주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과연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면서……

○**이종배 위원** 저는 비준동의 받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충분히 그렇게 말씀 주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잘못 나 가지고,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 아주 명확하게 미리 안 해 놓고 그냥 우선 관세만 인하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을 지금 주요한 고려 변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연방대법원에서 빨리 결정하면 보니까 5~6주면 날 수도 있다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정처에서도 국회의 비준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종배 위원** 3500억 불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도 이 자리에서 한 2000억~2500억 불이 좀 적정하지 않냐고, 부총리님 그때 얘기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어도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7월 말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것이 저는 참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1~2% 현금이다 이랬는데 아까 강승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책실장도 미일 간에는 상호 국내법을 존중하는 조항이 MOU에 담겨 있어 가지고 일본 국내법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한미 간에는 우리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 돼 있다 이렇게 정책실장이 발언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2000억 불 현금으로 가야 되고 일본은 일본 국내법 범위 내에서만 가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가지고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만 저희들이……

○**이종배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00억 불은 FDI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현금 부담하는 게 다르니까 그것을 잘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본은 3년 반 안에 5500억 불……

○이종배 위원 3년 반 안에 하잖아요, 트럼프 집권 시기 내에. 우리는 10년이고 10년 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불리한 점도 있을 수도 있다. 일본은 트럼프 집권 시기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고요. 일본 국내법에는 그렇게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관 장관님, 20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어디 강의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MOU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MOU에 그게 그렇게 분명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투자처 결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협의위에서 제안해서 투자위에서 결정하고 최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통제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거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양국의 사실상의 합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부에서는 미국의 유망한 투자사업, 투자처는 이미 미국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해 났다, 우리가 갈 곳은 리스크가 큰 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미국 쪽에서도 저희 쪽에서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날 X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 써 놓은 것 보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선 장관님 말씀을 믿습니다. 알래스카 그것은 아니다, 아까 이런 말씀이셨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알래스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나중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구매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 수익 가져가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종배 위원 우리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이자도 못 건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전에 원리금 회수한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이후에는 못 건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다음에는 1 대 9로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썄 말이에요, 너무 아쉽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무총리 포함해서 57개 행정부 책임기관장님들과 또 국회사무총장님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순서적으로는 과기부총리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국무총리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과기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위원님.

○박민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데이터 중심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DB 고도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49억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16개월이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조달청이 KISTEP에 보낸 공문을 보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각 과제는 개별 과업으로 발주하는 게 맞다, 통합발주하기에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조달 요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달청이 문제를 지적하며 조달 요청을 반려하자 과기부 산하의 KISTEP은 조달청을 통한 평가와 발주를 건너뛰고 조달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통합발주 방식으로 자체입찰을 강행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긴급 입찰인데요. 긴급 입찰 사유가 보통 경제위기 극복과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참고로 일반 입찰은 공고 기간이 4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긴급 입찰로 바꾸면서 공고 기간을 29일로 줄였습니다. 사업 기간 16개월짜리 사업을 고작 11일 공고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긴급 입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의원실에서 KISTEP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KISTEP이 말하기를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발주인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컨설팅 8억 9000만 원, 데이터 사업 23억 원, 기능 구축 사업 14억 원으로 사업 금액을 나눴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사업 금액이 20억 원 이하면 중견기업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KISTEP은 가장 적은 금액인 8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입찰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입찰을 해도 상관없는데 구태여 긴급 입찰을 진행해서 공고 기간까지 줄인 거거든요. 긴급 입찰로 준비 기간 최소화, 쪼개기로 입찰 자격 제한, 추정컨대 특정 기업 밀어주기의 전형적 형태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결국 KISTEP은 결과가 어땠나?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을 낙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낙찰된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누적액만 211억 원인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KISTEP의 사업 입찰 문제는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2025년도 범정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라고 하는—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관련 의혹으로 과기부와 KISTEP을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기부와 KISTEP은 기존 업체들을 사업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행안위원장을 찾은 KISTEP IRIS운영단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향후에는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하겠다’ 약속했지만 작년 말 행안위원장실 면담 이후에도 KISTEP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 발주된 3개 사업 모두 조달청을 건너뛰고 KISTEP 자체평가로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KISTEP의 DB 고도화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데이터 중심 범부처 R&D 통합 플랫폼 구축 ISMP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ISMP 사업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의 약어거든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 계획과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 활동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R&D 통합 플랫폼 구축 ISMP와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DB고도화사업의 컨설팅 업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기간도 겹칩니다.

그래서 의원실이 IT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부분에서 중복 사업으로 보일 확률이 높고 예산 49억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적인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이 이러한 예산 낭비, 부정의 정황이 있는 것을 검증하고자 KISTEP에게 산출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KISTEP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네 줄짜리 사업비 선정 가이드만 제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데이터 모델 작성, 통계 구축, 비용 소요가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주로 26년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현황과 지급예산을 살펴보니 계약금액 46억 원 중 25억 정도를 연말까지 집행합니다. 추진 일정상 올해 사업은 각종 요건 정의와 모델 점검 등 주로 8.9억 배정된 컨설팅 분야입니다. 사업비의 55% 이상을 올해 지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KISTEP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상황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과기부총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구조적인 부정의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을 세워서 국민의 혈세가 국가산업 발전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면서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은 조달청과 협의하는 과정도 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설계-구축-서비스로 연결되는 전체 사업 완성을 높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통합발주 상황도 벌어진 것 같은데……

○박민규 위원 제가 보기에선 과기부 내에서도 문제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KISTEP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조차도 한 번 더 냉정하게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보고 본 의원실에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종합적으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월 4일부터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시 주택가격 감정평가를 HUG 지정 5개 감정기관에게만 받는, 일명 HUG 인정 감정평가라는 걸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HUG 인정 감정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감정평가액 하락과 이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에 대해서 지난 8월 예결위에서 국토부장관께 질의했고, 다행히 HUG는 즉각적으로 보완대책을 10월에 발표해서 어떻게 했냐면 임대인이 일반 거래용으로도 HUG 인정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가 시장가격에 맞게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8월 예결위 질의에서 그 당시 금융위원장이셨던 김병환 전 위원장에게 금융위의 주택금융공사도 새롭게 전세보증제도 기준 변경에 대해서 우려를 지적했거든요. 9월 10일 날 취임하신 위원장님,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아시겠네요. 그렇다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을 하는 기준을 정할 때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문제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어요, PPT.

저게 저희 지역구 관악에 있는 사례들 쪽 뽑아 본 건데요. 관악구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다가구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의 평균 41%입니다. 표본이 좀 잘못됐을 수 있지만 41%입니다. 거래가가 1억인 집의 공시가격이 4100만 원 정도라는 뜻인데 이렇게 실제 거래된 가격과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8월 28일 적용한 내용은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값의 90%, 법인인 경우는 80% 미만이어야 되고 주택가격은 보통 공시가격의 14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기준이 만약에 공시가격의 140%라면 보증금의 한도는 그 금액의 법인은 80%, 개인은 90%니까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공시가 대비 112%나

126%인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40%, 50이나 60이라 하더라도 훨씬 낮게 책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증비용이 실거래가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 갭이 너무 큼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임차보증금 반환기에 몰리게 된다면 과도한 빚투로 한 것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전세사기 또는 이런 반환에 대한 문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HUG는 그걸 바꿨던 건데 금융위는 그동안 아무런 의원실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들이 깡통전세라든지 위험한 계약에 노출되는 걸 어떻게 방지해 주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택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아파트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나오는데 빌라·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나와서 공시가격을 빌려 오는데 사실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이란 괴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HUG 그런 거랑 참고를 해서 감정평가기관 활용하는 것, 이의신청 같은 것 허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번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주금공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검토하시고 좀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 주신 김에, 대한민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가 있는 이유가 대출이 가능한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들은 워낙 입지나 조건들이 다양해서 가격이 산정이 안 돼서 금융을 일으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자산가치가 없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자산으로서 가치가, 너무 큼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랑 금융위원회가 좀 협업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수가 아직도 원룸이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저층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산화해서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해야지만 그들도 자기 자산가치를 통해서 금융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롭게 노력해 가지고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서울시 관련해서…… 재정이 부족한데도 이 말씀 드려서 송구하기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서울시 하수관로 중의 66%가 20년 된 노후관로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노후 하수관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특히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6029km,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노후 하수관의 증가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 228건 중 절반 정도가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고 밝혀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 관악구 70년대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직 개발이 매우 못 된 지역인데 거기에 깔린 노후 하수관, 붉은색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좀 보기 불편하실 텐데, 이게 관악구 신림동과 남부순환도로 변 노후 하수관 파손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이 관악 및 서울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하수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09년도에 이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서울은 하수관이 이미 충분히 보급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동안 적용됐던 10%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폐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9년에 비해서 올해는 2025년, 이제 2026년이 다가오는데 서울시에 대한 10% 국비지원이 끊긴 지 시간이 오래됐고 서울시에 노후 하수관이 16년, 17년 동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노후 하수관은 매년 150km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에 의하면 자체 정비 최대치는 연 10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가 올해 발표한 재정력지수를 보면 서울시는 1.032, 경기도는 1.180입니다. 그래서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시는 17.1%였고 경기도는 35.3%로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2배에 달합니다. 물론 서울시·경기도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다른 지역을 더 챙겨야 되는 마음은 알지만 하수도법에 의하면 국가가 재정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법 시행령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력지수가 워낙 지방에, 또 지방은 하수도조차도 설치 안 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한다는 재정 우선 원칙이었는데요. 서울시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조금씩 한번…… 서울시민이 900만대지만 생활인구로 보면 1100만입니다. 안전 예산이니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음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원장님, 우리 정책감사가 혹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정책감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 직원들이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정책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감사원의 감사가 있던 것은 그것은 직무감사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직무감찰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정책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이 들어오면 뭐 영장도 없이 핸드폰도 가져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감사의 순기능은 알겠지만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뭐 불편할 수 있지만 과잉감사 또 정책감사라고 불리는, 미래를 위한 적극행정인데 5년 뒤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나쁜 결과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직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정책감사라고까지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못 했는데요, 예결위에서 굳이 말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행정을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의 최근 몇 년간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정치인도 배우고 있는데 감사원의 권력도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부분도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당은 행안부장관님 업무인가요, 아니면 기재부 부총리님 업무인가요? 공무원 수당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안부장관님께 여쭙볼까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공무원 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가요?

마이크가 꺼져서 죄송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쪽입니다.

○**박민규 위원** 추가질의가 없으니까요.

공무원들 야근수당 받겠다고 맨날 남아서 막 찍고 이런 것 막을 수도 없는데, 어차피 열심히 하는데 대한민국 민간기업들은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도 공무원들은 많이 안 올라서 구조적인 부패로 다 나뉘서 먹는 것 같으니까 수당을 그냥 현실화해서 일반적으로 올려 주면 안 됩니까, 야근과 상관없이?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희들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에서.

○**박민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논의하시고요. 국회에서 필요하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박민규 위원** 제가 보기에 하급 공무원들 괜히 야근수당 찍겠다고, 월급 적은 것 갖고 수당 찍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따로 한번 논의하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 오전 질의 시간이 초과되어서 관련 내용을 다시 요약해 묻습니다.

앞으로 극한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또 가뭄으로 인한 대형산불 등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산청 산불에서 목도한 것처럼 대형산불은 또 임도를 제대로 개설하지 않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서산·당진 등 충남 서부지역을 강타한 홍수피해 원인 역시 하천 준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토사가 하상에 쌓여서 하천 수위가 주변 저지대보다 높아지는 바람에 제방과 빗물펌프장이 수마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범람하고 또 주변 마을들을 집어삼키지요.

차관님, 환경부 차원에서, 치산치수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하천 준설하는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산림보전도 자연 상태로 방치하면 오히려 파괴가 된다고 그러고요. 하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의 네거티브 규제부서를 좀 벗어나서 생산적 규제부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배경훈 과기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장관님, 지방균형발전이 과기부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나요?

과기부 안 나오셨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AX 관련해서 지방균등발전이 필요합니다.

○**강승규 위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범부처 차원의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이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정주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없으면 이런 지방균형발전을 아무리 외쳐 봤자 공염불이 되지요.

장관님, 과기부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관련 예산이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 지역구인 홍성에서도 충남 혁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작년에 5억 원의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재고등학교를 홍성 등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용역을 진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용역 발표를 미루고 2년씩이나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다만 각 지역별로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를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했고 용역이 사실상 끝났다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냥 이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고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당성 용역이 발표가 되지 않으니깐 과학영재학교를 우리가 설립하겠다, 또 카이스트하고 MOU를 다 체결했지만 추진을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혹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또 야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던 거 멈춰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수립이 안 돼 있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과학기술 관련한 영재학교 신설이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하고 광주 그리고 각 과기원이 존재하는 지역별로 부설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홍성의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이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신도시가 형성돼 있는데도 10만 목표는 아직도 어렵고 없고 이런 학교들이 없으니깐 여기 들어와 있는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기업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또 다 떠나요. 천안으로 떠나고 대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방균형발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에 대해서 과기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고 용역도 결론을 내셔서 내년 예산에 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랑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기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력망 확충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8 대 26 이 숫자 우리 기후부장관님은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는 98%가 늘었는데 송전설비 확충은 26% 증가에 그쳤다. 이 갭이 지금 악어 입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최근에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이러한 투자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또 이러한 AI 쪽은 그야말로 전력 먹는 하마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W 정도에 달하는 대형 데이터센터 1개가 지금 소모하는 전력이 우리 제주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소비량의 한 10%를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는 전력망 확충이 지금 시급한데요. 향후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5년이 그야말로 전력망 확충의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AI와 같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을 놓치게 된다, 국가경쟁력에 치명상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빨리, 송배전망 확충에 지금 열을 올리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38년까지 깔아야 될 송전망이 6만 1000km에 달합니다. 1.7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 73조의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전력망 확충은 지금 한전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지금 달리지요, 힘이. 건설 역량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 공기보다 5~7년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망이지요. 고전압 전력망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확충해야 될 소요의 60% 정도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타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전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200조를 넘고 지금 부채 비율이 한 47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민간의 건설 역량과 자본을 조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민자사업으로 제가 제안한 게 BT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을 합니다. 완공 즉시 바로 소유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 관리의 통합 관리에는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민간을 활용해 가지고 조기 완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력망 확충법 등 세 가지 법 개정을 내놨고요. 다른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조기에 통과돼서 우리 전력망 확충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부장관님께서 좀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전력망 건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민간의 건설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법률안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법률도 정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과기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가컴퓨팅자원센터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안도걸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해서 광주에 유치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지금 무산이 돼 가지고 큰일이 났습니다.

왜 이런 공약이 제시가 됐을까요? 그것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그동안에 꾸준히 앞장서 인프라를 또 생태계를 조성해 왔기 때문이겠지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에서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16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인프라도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단계 집적사업도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컴퓨팅자원센터가 광주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약이 제시됐는데요 이게 무산이 된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크게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지요. 대통령께서도 ‘광주시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광주가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컴퓨팅자원센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입니다. 지금 광주 2단계 실증사업인데요 이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추론에 강점을 가진 NPU 자원이 많이 확충돼야 됩니다. 그래서 NPU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 연구소지요. 국가 연구소의 경우에는 광주에 이왕에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R&D 기능이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AI 중심 도시가 되고 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5극3특의 호남권 메가시티로서의 그 위상을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현행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조금 바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PU 중심인데요 향후에는 블랙웰과 같은 차세대 GPU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공약, 그 과정 그리고 또 민심을 잘 알고 계시는 총리님께서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광주가 그동안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주도산업 AI 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을 굉장히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30년까지 AX 기술 개발 그리고 AX 실증 인프라 조성에 대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광주가 앞으로 도시·생활 AX나 연구 개발·실증 지원, 원스톱 지원 체계 등 광주를 AI 시범도시로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과기정통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광주가 AI의 어떤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고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고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광주가 AI 시범도시로 시작하는 과정에 제가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관여했었기 때문에 저도 아쉬움을 광주시민 못지않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속도감 있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겨서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총리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소영**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APEC 치르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힘드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계신 걸 제가 보면서 참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짚어 볼 사항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이 말이 나왔는데 한미 관세협상 관련한 국회 비준동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떡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제처에서 발간된…… 개념입니다. 조약, 협정, 양해각서, 의정서.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는 될 수 없지요.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 검토하셨을 거고요.

다음 보시지요.

국회 비준동의를 한 게 있는데 저 위의 것을 보시면 양해각서라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양해각서라고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내용상 이것은 조약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뭐가 됐든 어떤 형식이나 이게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체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법제처장께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동의 여부의…… 이것 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뭐라 그럴까요, 달리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 PPT 떡위 주세요.

총리나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9월 4일 날 일본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 당시에 앞으로 미국과의 합의가 MOU 형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례도 알고 계셨지요, 실제로는? 16일입니다, 저게. 그런데 4일 날 일본 거를 보고서도 말씀하신 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측에도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일 날.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언제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뀐 겁니까, MOU로 하기로?

○**외교부장관 조현** 어느 정해진……

○**김기웅 위원** 시기.

○**외교부장관 조현** 어느 정해진 시점이 있고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로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미국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을 맺는 조약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미국으로서도 전례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에 법안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미 FTA 관련해서?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미국은 동의보다는 입법 절차를 거쳐서, 미국 법이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번에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FTA 미국 법안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도 여태까지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라는 게 좀 어려운 부탁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하실 수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당연히 검토를 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김기웅 위원** 그러면 MOU로 가야 된다는 걸 아셨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왔고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MOU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저렇게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러나 우리로서는 국회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김기웅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이나 총리께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사전에 상당히 예상을 했는데 국회에 와서는 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사실 알고 계셨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얘기를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MOU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답이지 저렇게 ‘뺏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아,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믿으셨을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왜 이 좋은 일을 놓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느냐 그 점에서 저는 조금 처리 과정이, 뭐 사정은 있었겠지만 좀 나이스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뭐 법리적으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 동의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미국 측 사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좀 더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경찰청장님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직무대행입니다.

○**윤후덕 위원** 보이스 피싱 그리고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를 찾아내고 또 근절시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 100명 정도가 감금이 됐다고 신고된 상태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요.

그사이에 이제 많은 일을 했어요. 경찰에서는 지난 23일인가, 10월 23일 여러 나라하고 공조하는 발족식을 하고 그랬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아세아나폴하고 동남아시아 쪽 나라들하고 해서 국제공조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거기 범죄단지, 아지트지요, 아지트.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지요, 소굴.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를 갔더니 여기서 보이듯이, 여기에 이쪽 보면 전화 부스예요, 전화 부스. 이게 전화방이에요. 전화 부스가 이렇게 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PC방이에요, PC방. 그러면 이 전화 부스에서는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저쪽 PC방에서는 텔레그램이나 이걸 가지고 채팅해 가지고 로맨스스캠 하고 그러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한국 사람, 범죄자들이지요. 저기 앉아서 안락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다 전화를 해요? 채팅을 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다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외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윤후덕 위원**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도 떨어지고 경주에도 떨어지고 파주에도 떨어지고 여기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좀 높으시지만 당했지요? 당하신 분도 계시지요?

총리님,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국회의원 하실 때 ‘의원님, 이것 빨리 좀 조사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들 많았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던,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왔던 그 전화나 이 PC방 이쪽에서의 것들은 다 사실은 외국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외국 나가서 해요, 이 사람들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무래도 외국에 있으면 쉽게 검거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직무대행입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있는 데에다가 전화를 했어, 범죄를 했어.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파출소나 경찰서 가 가지고 신고했어요. ‘이 전화가 범죄하는 놈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를 몇 시간만큼 찾아내요, 위치하고 가서 잡는 게? 위치 추적하면 금방 잡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위치 추적을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전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 전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IP라고, 위치 IP 장소가 나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그게 외국에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국내에 있거나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금방 잡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바로 잡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나 텔레그램에 의한 범죄는 사실은 국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 범행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전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 동남아에 있고 캄보디아에 있고 그런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소굴에 가서 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총책이나 중간은 여기에 다 있고, 외국에 있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는 그 밑에서 통장이라도 좀 모아 주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잡았어요. 파주에서도 1년에 한 300명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 조직하고 동남아에 있는, 이를테면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하고가 하나의 범죄 단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간이나 총책을 잡아야 이거를 척결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에 갔어. 그래서 저놈이 범죄야. 그런데 내가 총도 가지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수갑을 가지고 가요? 못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우리 경찰이 못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공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지 경찰이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그만큼 공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거기도 ‘님’ 자라고 해 드러야지. 주석님하고 두 분이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하고 저쪽의公安부의 수장하고 MOU를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나 하면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를 하기 위한 합동 작전을 하고 공조 수사를 하겠다’, 이거 문구를 제대로 뽑았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하는 망을 실시’, 리얼타임으로 움직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연락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청장님 직무대행이시지만 이 국회에서 더 제가 지원할 거 없어요? 예산 부족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저희가 그래서 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도 만들었고 또 이번에 이제 국제공조를 위해서 26년 정부안이 있지만 추가로 국제공조에 더 필요한 예산 증액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증액 이런 부분에서 좀 국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문서로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세요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국제적 공조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거기다 또 중국 가면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딱 해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윤후덕 위원 지금 해야 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우리 외교부나 그리고 또 법무부 이렇게 부처가 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외교부하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때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외교부장관님하고 저하고 다음 주 초에 캄보디아에 가서 MOU도 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님하고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님, 경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윤후덕 위원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부산 사상 김대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총리님, 국무위원님, 다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을 말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김대식 위원** 영등포가 지역구니까 당연히 반대하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지역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또 제가 해당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시다.

○**김대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에 동남권국책은행을 만들겠다 이것 공약하신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때 정확한 위당은 동남권투자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요,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국책은행이었고 해수부 이전이고 HMM 이전이고. 그런데 이제 공사로 바뀌었어요. 산업은행 자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산은 계속해서 희망고문만 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사실 진짜 희망고문은 산업은행 이전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력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때부터 희망고문으로 몇 년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부산에 필요한 산업금융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고용 문제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동남권투자금융공사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부산만 단독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5개 권역으로 펼치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고래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참치로 변했다가 다시 멸치로 변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상당히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달래 줄 방법이 없습니까? 해수부 이전 하나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 이전 적극적 찬성합니다. 전재수 장관님 계시지마는 적극적 찬성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산업은행까지 같이 오고, 그렇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공약한 동남권투자국책은행 플러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게 진척이 없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린다 이런 생각 하는데……

총리님께서서는 지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산이 점점 인구도 축소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해양 수도로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지켜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해수부 이전으로부터 시작되는 해양 수도로의 비전,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더해서 사실은 원래 동남권투자금융공사가 산업은행의 출자 플러스알파를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조속하게 속도감을 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의견을 냈던 분들,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우선 산업은행 자회사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이 더 내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애초에는 사실상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도 이전하고 또 동남권투자국책은행을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라져 가는 입장에서 부산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캄캄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의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산업은행은 정말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당초에 대통령께서 공약한 동남권국책은행만이라도 부산에 선물로 주게 되면 이 정부도 아주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잠재수 장관님이 탄생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패키지로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부산에 대한 애정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과의 여러 가지 인연, 정치를 꼭 인연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연·연고 이런 것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당연히 깊은 애정이 있고 아마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저는 부산을 진짜 해양도시로서 정말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이것은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 꼭 정부의 의지 차원을 넘어서.

○김대식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제가 동남투자공사 짧게 한 말씀.....

해수부장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당시에 동남권투자공사와 동남권투자은행을 혼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뭐냐 하면 동남권에 있는 여러 해운·물류를 포함한 제조업까지 집중적으로 광범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은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 50조 원 정도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은 여신도 해야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신도 해야 되고 또 금융 규제 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BIS 비율도 맞춰야 되고, 이게 어느 세월에 안정적인 50조 정도의 투자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를 만들게 되면, 공사채 발행을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 한 15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자본금 한 3조 정도면 50조 원의 정도의 투자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더라는 말씀 드리고, 이 투자공사야말로

고래입니다. 은행이 멸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무튼 지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총리님과 전재수 장관님께서 지혜를 한번 모아 보세요. 모아 가지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투자공사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부산 동남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동남권투자공사 처음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부터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설명에 보태서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같이 챙기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진보당의 전종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국무총리님하고 고용노동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좀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시면 병원 가지지요? 병원 가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가장 먼저요?

○**전종덕 위원** 간호사이지요? 간호사 만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종덕 위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이거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 그리고 끝없는 초과근무 현실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63%에 달하고 간호사의 초과근무율은 무려 76%로 나타났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이 근무환경 속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무려 80.6%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1년 이내의 퇴직자는 43.4%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 안전사고 위험률을 무려 16.5%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NIH(미국국립보건원)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의료 과오율이 발생하는 것이 2배 이상 높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의료 과오 발생률이 최대 2.5%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복지가 아니라 환자 안전 정책입니다.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종덕 위원** 시범사업 결과도 혹시 보셨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결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시범사업 결과 직원 행복도는 1.8점이 그리고 직장 만족도는 14.8점이

상승을 했고 이직 의향은 7.4%가 감소했고 의료서비스 개선 체감도는 10.9점이 높아졌습니다. 주 4일제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간호사들 같은 경우 면허취득자가 약 5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무총리 김민석 50%가 안 될 겁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맞습니다. 5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도 이렇게 5년 미만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떠날 정도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 주 4일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저는 주 4일제 도입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경력 단절 간호사들의 복귀를 촉진하고 의료사고와 이직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95번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이것을 도입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될 사업장이 보건의료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간호 영역일 수도 있고 금융 영역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미 외국에서는 병원 현장과 금융 현장에서 이미 기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저는 주 4일제는 의료현장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의료현장에 가장 먼저 도입돼야 된다. 그것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종덕 위원 고용노동부차관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워라벨+4.5 프로젝트 지원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전종덕 위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생명·안전 업무…… 저 지침서 한번 봐주십시오, PPT. 장시간 교대근무 사업장을 우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의료현장이 바로 교대근무 야간근무가 필수적이고 장시간 노동과 인력난이 높은 이직률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의 워라벨+4.5 프로젝트의 취지에 가장 맞는 사업장이 보건의료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워라벨+4.5 프로젝트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화 컨설팅 사업의 핵심 지원 사업장으로 보건의료 사업장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26년 예산으로 정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 한 32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또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사회적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또 국무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께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관님 나와 계시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10월 20일부터 서울은 토허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 조치로 인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혹시 피해를 볼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사전영향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거는 사전영향분석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시뮬레이션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거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그거를 통과했고요.

○**조은희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양천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또 추가로 지정됐는데요. 추가로 지정되기 이전에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했거나 또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조합원 자격을 현재는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건축.....

○**조은희 위원** 그런데 양천구청이요 10월 20일 날—시행된 날이지요—국토부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제저녁까지도 국토부는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은요 목동아파트 사례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양천구민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민원을 제기했더니 국토부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라 이렇게 떠밀어요. 중앙부처가 정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구청장, 민원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조합원 자격이 논란이 된 사례가 15건이 있고요. 부동산 매매약정 체결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청 건이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 전 약정서를 쓰고 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합원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면서 여의도, 목동에서만 50여 명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 내용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왜 보름이 넘게까지, 남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그전에 원칙상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억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 구제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고요. 빨리 정리하셔서 빨리 양천구청에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은희 위원 이제 와서 논의를 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아니, 계속 그 정보를 저희가 알고……

○조은희 위원 원래 안 된다는 말씀도 저는 틀렸다고 보는데요. 차관님이 지금…… 차관님은 무슨 죄겠습니까만 책임을 좀 느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조은희 위원 이상이고요.

감사원장님, 임기가 곧 끝나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조은희 위원 언제 끝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조은희 위원 지난 4년 동안 감사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소회, 아쉬웠던 점 또 감사원이 어떻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속이 시원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요? 아쉬운 점도 없으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감사원장 최재해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조은희 위원 그러면 후임 감사원장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의 최고의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총리님, 충청권의 관문 공항이 청주공항인 것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종배 위원 충청북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거든요. 그게 원래 군 공항이기 때문에 활주로는 2개인데 하나는 군에서 쓰고 하나는 민하고 군하고 같이 쓰거든요. 이게 군하고 같이 쓰니까 뜨고 내리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청권 사람들은 다 거기 청주공항 오고 경기도 남부도 청주 와서 타다 보니까 지난해에 승객이 한 460만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 활주로는 필요하다 그런 것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이번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청주공항 활주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도민들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체 시도민들 116만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충북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한 5억 정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차관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나 좀 넣어 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는 민간인이 너무 많이 타니까 지금 화물차하고 같이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전용 활주로를 만들어도 한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예산 하고 절차 다 거치려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충주에도 비행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민하고 군하고 같이 쓰는 민·군 활주로는 화물만 쓰는 게 좋겠다는……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용역도 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전에 제가 국토부장관님한테도 건의했던 건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우리 충청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대학병원 분원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거의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청북도 북부에 충주가 중심이니까 거기에 상급종합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예타 신청을 했어요. 그 예타 신청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예타 잘 도와주셔서 가지고 예타 신청이 됐는데……

예타 신청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줄이라는 대로 병상수도 다 줄이고 그랬는데, 빨리 좀 챙겨 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예요. 복지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자꾸 고령화되서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다 서울 오시고 충주에서 원주 가시고 청주 가시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자꾸 옮기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것은 각 지역에 상급병원도 골고루 넣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국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총리님, 병원 같은 것 지역에도 골고루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병원 없으면 지역균형발전 안 돼요. 기업체들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총리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총리님, 아까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연이은 정책 실패로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이런 혐중 세력과 결탁하면서 거기에서 희망과 위로를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방에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감방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우리가 K-컬처 그다음에 K-푸드에 대변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계적 붐을 이루면서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혐중 정서에 전혀,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병진 위원 행안부장관님,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것?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이병진 위원 완전히 박멸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박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안전으로 제안을 해서 혐오시위 범죄에 대한 단속 방안이 경찰청에 수립이 됐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한국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꼭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혐중 시위에서 북괴, 짱깨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요? 국익에 백해 무익한데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님? 차관님이십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부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화제를 바꿔서 국방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PPT 한번,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정감사 최초로 공개한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이 발견되고 보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산소통도 있어요. 장관님, 국방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은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중국 측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고 또 해수부 또 외교부와 함께 다부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군도 비례성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때도 중국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문제제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20살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을 말이지요 무역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해역 상황을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항상 대화와 타협을 외칩니다. 보도와 같이 어느 나라와 협상할 때 대화와 타협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단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대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행위자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는 결국 실질적인 양보라든지 영구적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그들의 일관된 전술·전략입니다. 지금 남지나해, 동지나해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점진적인 압박 전술을 전개합니다. 영역 확장형 분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해경, 민병대를 대량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비군사적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득점을 해 갑니다. 포인트마다 말이지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실질적 관할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해양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굳히기라는 기정사실 전략입니다. 이것 봐요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다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이웃사촌이 되기 위해서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더 할 얘기를 해야 되고 서해를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때만 해결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먼저 PPT 띄워 주실래요.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인천 행정체제가 2군 9구로 개편 확정이 됐는데 행안부, 정부 법안으로 통과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위원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아직 법사위에 계류……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의 원안 말입니다. 원안이 행안위의 정부입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왼쪽이 내년 7월에 오른쪽같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이 좀 이상하지요? 보면 같은 중구인데 저렇게 파란색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동구가 너무 작지요. 그리고 서구가 있는데 서구가 지금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좀 교통정리를 하니까 영종을 따로 떼고 또 중구와 동구를 합치고 서구를 검단구로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더 정리가 됐지요. 그래서 저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입법으로 저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에 보면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 지원 하고 통합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 부족 발생 시 4년간 보전하고, 이런 법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같이 고치다 보니까 정부입법에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도와준다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폐치·통합에 대한 조항인데요.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추진한 부분은 분할도 있고……

○**배준영 위원** 통합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통합도 있고 신설도 있고……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폐지도 있습니다. 동구는 폐지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지금 통합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정부입법이라고 하지만 인천시에서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양해를 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라서……

○**배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치·분합 모두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그 지역의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인구 변동이라든가 합리성에 따른 폐치·분합의 경우에는 그것을 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됐지요. 아시지요, 그 내용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행안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통과를 했고.

다음 PPT를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인천 공약에 ‘3개 신설 자치구(제물포·영종·검단)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게 있고, 영종구와 제물포구는 제 지역구에 걸쳐 있기도 하지만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 법 개정안을 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기조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를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것은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재정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리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식·김기웅·강승규·이성권·배준영·조은희·안도걸·김한규·이병진·전종덕·윤후덕·박형수·이소영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속기사분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산회)

○출석 위원(47인)

강승규	고민정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우재준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출장 위원(2인)

곽상언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 최재해

사무총장 정상우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외교부

장관 조현

통일부

장관 정동영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법무부

장관 정성호

차관 이진수

국방부

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김창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조달청
청장 백승보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손제한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기획조정관 이진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상청

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사무차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이상 3건 11월 6일 회부됨